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인쇄/1998년 10월 31일

발행/1998년 11월 4일

발행처/민족통일연구원

발행인/양영식

편집인/국제관계연구실

등록/제2-2361호(97.4.23)

(142-076)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대표)900-4300 (직통)901-2527 팩시밀리 901-2543

© 민족통일연구원, 1998

민족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한국경제서적 : 737-7498

ISBN 89-87509-45-1

5,000원

역설회의총서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민족통일연구원·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공동주최 워크샵('98.9.23) 발표논문집

민족통일연구원

- 본 자료는 중국에서 열린 민족통일연구원과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공동주최 한·중 워크숍('98. 9. 23) 및 요녕성 사회과학원과의 간담회('98. 9. 25)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민족통일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차례 -

▣ 주 제: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1 Session: 남북한관계 1

● 발 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구조와 기본방향(황병덕 연구위원) 1

북한의 대남정책(于美華 教授) 15

● 토 론 17

2 Session: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21

● 발 표

중국의 대북한정책: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분석을 중심으로
(신상진 연구위원) 21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김영춘 연구위원) 42

클린턴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결정요인(이현경 연구위원) 55

일본의 대한반도정책(楊伯江 副教授研究員) 73

동북아와 중·미관계 전망(丁奎松 研究員) 75

● 토 론 78

▣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陸忠偉) 면담요지 82

▣ 요녕성 사회과학원과의 간담회요지 84

▣ 요녕성 사회과학원장(趙子祥) 면담요지 89

1 Session: 남북한관계

- 사 회: 丁奎松(所長辦公室 主任, 研究員)
- 발 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구조와 기본방향(황병덕 연구위원)
 - 북한의 대남정책(于美華 教授)
- 토 론: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김영춘(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헌경(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배(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丁奎松(所長辦公室 主任, 研究員)
楊伯江(東北亞研究室 副主任, 副教授研究員)
戚保良(東北亞研究室, 副研究員)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구조와 기본방향

황병덕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대북포용정책 추진배경

한국은 남북한간 교류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7·4 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한간 신뢰분위기 조성과 남북한간 교류협력 실시를 북한과

2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합의한 바 있다. 전두환 정부하에서도 평화정착과 교류협력을 통한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목표로 민족화합을 위한 「남북한 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을 북측에 제시하였다. 노태우정부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입각하여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시도하여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하는 결과도 가져왔다. 이처럼 역대 한국정부는 한결 같이 대북포용정책을 실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여 현 한국정부의 햇볕정책과 내용적으로 일맥 상통하는 태도를 보인 바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북정책들은 대부분 북한을 흡수통일하려는 정책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예컨대 과거 김영삼 정부는 북한붕괴론에 입각, 외교·군사적으로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북한봉쇄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는 북한체제 개혁·개방을 유도하는 개입정책의 추진을 통해 북한붕괴를 촉발시키는 대북 양면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맞서 북한은 남한체제에 대한 우위 상실, 우리정부의 성공적인 북방정책 등의 변화된 상황으로 인해 한반도의 공산화통일보다 북한체제 수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대남 「분리차단정책」을 구사하였다. 북한은 외교·군사적으로는 대미관계 개선을 위해 통미·봉남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한국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기 위해 당국간의 대화는 회피하고 극히 제한적 범위에서 남북한간 경제교류를 행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대남정책 구사로 인해 북한붕괴론에 입각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을 상실한 결과, 북한정권의 상대적 공고화와 더불어 분단의 고착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 「국민의 정부」는 현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기 보다는 평화공존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는 등 발상을 혁명적으로 전환하였다. 더욱이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통일정책

이라는 용어 사용 대신 대북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정부가 이러한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북정책의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 기본구조에 대한 오해·비판으로 말미암아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구사에서는 적지 않는 차질과 혼란이 국내·외적으로 야기되고, 또한 논란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민의 정부」의 제2의 건국이념에 상응하는 대북정책의 구조와 기본방향을 논의함으로써 국내·외의 오해와 비판을 불식시키고자 한다.

II. 대북포용정책의 목표와 기본이념

한국정부는 평화정착을 통한 남북한 평화공존의 실현과 더불어, 대북정책 3원칙에 의거하여 남북한간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현단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였다. 한국정부가 대북정책 목표를 남북한간 평화·화해·협력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과거 상대방 압박을 통한 대북통일정책이 분단의 고착화, 분단고통의 증대, 인권 훼손 등의 비인간적인 상황을 초래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 착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목표설정에는 북한이 체제내부의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주변환경 및 주체사상에 입각한 유교사회주의체제의 점진적 변화를 통한 체제유지는 가능할 것이라는 현실적 판단이 기본적인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므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은 實事求是라는 논리적 기초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찰할 때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를 둘러싼 통일의 주변환경과 북한정세로 미루어 볼 때 당장 통일의 실현은 어렵다는 전제하에서 무력대결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우선시한다는 「先평화·後통일」정책을 의미하고 있다. 전쟁위험이 여전히 상존해 있는 한반도에서 남북한이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지양하고 상호체제를 인정·존중하는 가운데 한반도 분단을 평화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화해를 통한 남북한간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것이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기본철학이다.

「先평화·後통일정책」은 남북한 관계의 현상유지 (Status quo) 변경을 목적으로 추진한 대북포위압박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남북한간 분단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점을 직시하고, 남북한 관계의 현상유지 상태에서부터 북한의 변화를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이를 위해 북

한의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화해·협력을 통해 북한의 변화여건 조성을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하나의 민족에는 변함이 없지만 북한 정부의 실체만은 인정한다는 합리론에 기초하여, 한반도내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은 인정하나 상호 외국이 아님을 강조함으로써 남북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1민족 2국가론」에 입각하고 있다. 이러한 「1민족 2국가론」에 입각하여 한국정부는 북한과 1991년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유엔에 동시 가입도 하였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통일을 포기하고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평화공존의 토대 위에서 남북한간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시킴으로써 법적인 통일인 국가통일 보다 사실상의 통일상태인 「민족통일」을 먼저 이룩하려는 「先민족통일·後국가통일」 의미를 지닌 점진적 통일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이 가까운 장래에 달성될 전망이 없다는 판단과 함께 분단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서 「先민족통일·後국가통일」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민족의 동질성과 상호신뢰를 회복하여 남북한간 상호의존성을 제고함으로써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할 것이다.

과거 한국정부의 북한 고립봉쇄정책과 북한의 대남 분리차단정책 간의 충돌로 남북관계는 군사적 대결, 체제경쟁 등의 「적대적 갈등관계」를 맺고 있었으나, 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념적 대결에 따른 군사적 대결 및 체제경쟁 관계에 있으면서도 한반도 분단의 평화적 관리와 함께 사회·경제적 교류·협력을 추구하는 「경쟁적 협력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힘의 우위정책」에 입각한 통일정책 보다는 분단질서의 평화적 관리 및 화해·협력에 중점을 두는 현실주의적 대북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되는 가운데 한민족으로 하여금 체제비교를 통해 통일한국의 정치경제체제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함으로써 국가통일 달성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우리 민족 내부의 문제인 동시에 주변 강대국들의 문제라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다. 한반도 평화·안보문제에 관한 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 체제의 대결적인 모순·갈등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취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즉, 우리 민족의 장래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하지만, 한반도 분단은 단순히 남북한 분단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체제 대립과 일정한 맥을 같이 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정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협조와 지지가 필요하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바란다는 점에서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대북정책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 미국 등 주변국들은 북한의 체제위기로 인해 급작스러운 북한붕괴를 예방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북한에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개입·확대정책을 통하여 북한의 호전성을 순화시키고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동아시아의 냉전적 대립을 해소하고 평화와 안정을 회구하는 국제주의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은 과거 정부와는 달리 대북정책을 정권안보 차원에서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 특정인들이 밀실에서 대북정책을 추진하거나 정부의 공식기구가 아닌 비선조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과거 남북한이 「적대적 공존관계」에 입각

하여 대북정책을 국내정치에 모두 활용하였으나 김대중정부의 대북 정책은 국민의 이익에 봉사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고 일관성과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참여민주주의에 입각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한반도 주변국들의 이해와 신뢰를 높여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은 물론 남북관계의 개선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박애주의적 도덕성과 인도주의 존중 원칙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대북정책 철학은 경제난에 봉착하여 있는 북한주민들의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고 식량지원, 농업지원 등을 추진하고 이산가족문제를 해결하려는 인도주의적 정책에서 나타나고 있다.

Ⅲ.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원칙 및 방향

1. 한반도 평화·안보정책

한국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한관계의 개선을 대북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러한 정책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① 평화를 파괴하는 무력도발 불용, ② 흡수통일 배제, ③ 화해·협력의 적극 추진이라는 대북포용정책의 3대원칙을 설정하였다.

한국정부 대북정책의 첫번째 원칙은 북한의 어떠한 형태의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으며, 전쟁억제를 위한 확고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면서 무력도발에 대해서는 상응한 대응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국민의 정부」는 북한의 대남테러, 무력도발, 무력통일노선 등 민족공멸을 초래할 수 있는 폭력이나 무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대북억지력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김대중정부는 한반도에서의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감으로써 한반도에 적극적인 의미의 평화를 정착시키고자 한다. 즉 평화를 파괴하는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원칙은 우선 현재 강력한 안보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북정책의 하부 원칙으로 안보태세의 유지, 남북한 군사적 신뢰조치 구축,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집단안보 구축 및 다자간 안보협의체 추진 등이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의 안보관련 주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에서 한국정부는 대북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한반도 안보문제를 측면 돌파하기 보다는 평화·안보정책의 추진

으로 정면 돌파하는 정공법을 택함으로써 현재 한반도에서는 평화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대내외에 인지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정착과 평화공존을 가져오는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화정착을 통해 남한의 보수층과 북한의 강경보수파의 입지를 약화시킴으로써 정책 추진 공간을 넓힐 수 있을 것이므로 북한체제를 중국 및 베트남처럼 개혁·개방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 분단을 단순히 민족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동북아시아 내부의 체제갈등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는 인식하에서, 한국정부는 남북한간 관계 뿐만 아니라 동북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고려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안보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관계의 정상화 및 통일로의 접근은 동북아시아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를 통해 가능하다는 인식 아래에서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동북아시아정책과의 연계성하에서 추진하고 있다.¹⁾

한국정부는 한반도 평화문제가 남북한간의 안보문제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질서와 연계되어 있다는 인식하에서 한반도 평화·안보문제 관련 제반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 완화·해제 및 북한의 대서방 외교관계 개선을 용인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한반도 평화 및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대북경수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한반도 평화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일련의 평화협정 및 불가침협정을

1) 동·서독간의 평화문제는 독·소불가침조약인 모스크바조약, 독폴란드 불가침조약, 4대국 베르린협정 등의 일련의 긴장완화관련 협정체결, 동독의 대서방 외교관계 정상화 및 서독의 대동방 외교관계 정상화 등과 더불어 나토와 바르샤바조약군간에 일차적으로 조정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동·서독이 동시에 가입하였던 유럽안보회의 (CSCE)가 양독의 대외적 약속 이행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을 하였던 바, 이러한 다자간 국제회의는 양측간의 안보와 교류·협력을 제도적으로 보장·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체결하고, 동북아시아 다자간 안보대화체 구축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의 제2원칙은 「흡수통일배제 원칙」이다. 흡수통일이란 어느 한 국가가 자기체제를 포기하고 상대방 체제를 받아들거나 한 체제가 붕괴하여 다른 체제에 흡수·병합될 경우 이루어지는 통일 형태이다. 한국정부는 무력대결의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공존을 이룩하는 것을 대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더욱이 흡수통일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저해되고 비현실적인 북한붕괴론에 입각하고 있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상대방의 이익은 우리의 손해라는 냉전논리에 의거하여 북한을 포위·압박함으로써 북한붕괴를 유도하는 흡수통일론을 배제하여 이를 「흡수통일배제 원칙」에서 천명하고 있다.

2. 남북한간 화해·협력정책

김대중정부 대북정책의 제3원칙은 평화정착 기반 위에서 남북한간 화해·협력을 적극 추진하는 「화해·협력의 적극추진」 원칙이다. 이를 위해 한국정부는 남북한간의 적대적 관계를 지양하고 상호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대북 화해·협력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남북한간에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고 민족 전체의 복리가 증진될 수 있도록 각종 분야에서의 대북 교류·협력을 도모한다.

김대중정부는 「평화·화해·협력」의 대북포용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평화·안보정책과 함께 남북한간 동질성 증대 및 분단고통의 감소를 위한 화해·협력정책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분단 이후 누적된 남북한간의 적대감정을

해소하고 상호 이해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실현 가능한 분야부터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정부차원에서는 상호주의 원칙, 민간차원에서는 정경분리원칙, 정부·민간 차원에서는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수행되고 있다.

한국정부는 남북한간 교류·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을 단순한 시혜적인 지원대상으로서가 아닌 동등한 대화·협상의 동반자적 관계로 규정하는 대북 상호주의 원칙을 대북 화해·협력정책의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대북 상호주의원칙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남북한이 서로 필요로 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상호 타협·수용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나가는 원칙을 의미한다. 상호 불신이 상존하고 있는 남북관계에서 상호주의 원칙은 「주고 받는」 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 불필요한 명분 경쟁을 지양하고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효율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북 상호주의 원칙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100을 주면 북한으로부터 100을 받아야 한다는 「철저하고 엄격한 상호주의」가 아니라 유연하고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의미한다. 즉 대북 상호주의 원칙은 엄격한 조건과 등가성을 갖는 상호주의 원칙보다는 시차성과 상대의 형편을 감안하는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이다. 이와 같이 한국정부가 유연하고 신축적인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 점은 동족에 대한 아량과 포용적 대북자세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향후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노력에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면 우리정부의 대북 상호주의 원칙 구사시 상당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대북 협상에 임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대북 경제교류·협력을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추진하고 있다. 대북 정경분리 원칙이란 남북한간 정치·군사적 사안과 경제교류협력을 직접적으로 연계시키지 않고 상대방의 이익은 나의 손해라는 영합게임적인 냉전논리에서 벗어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정합계

임적 입장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원리에 따라 남북한간 경제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한국정부는 북한의 잠수정 침투사건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금강산 관광사업 추진을 허락하고 있으며,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하여 남북경협을 활성화해 나간다는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기업인 방북 확대, 투자규모 상향조정, 경협절차 간소화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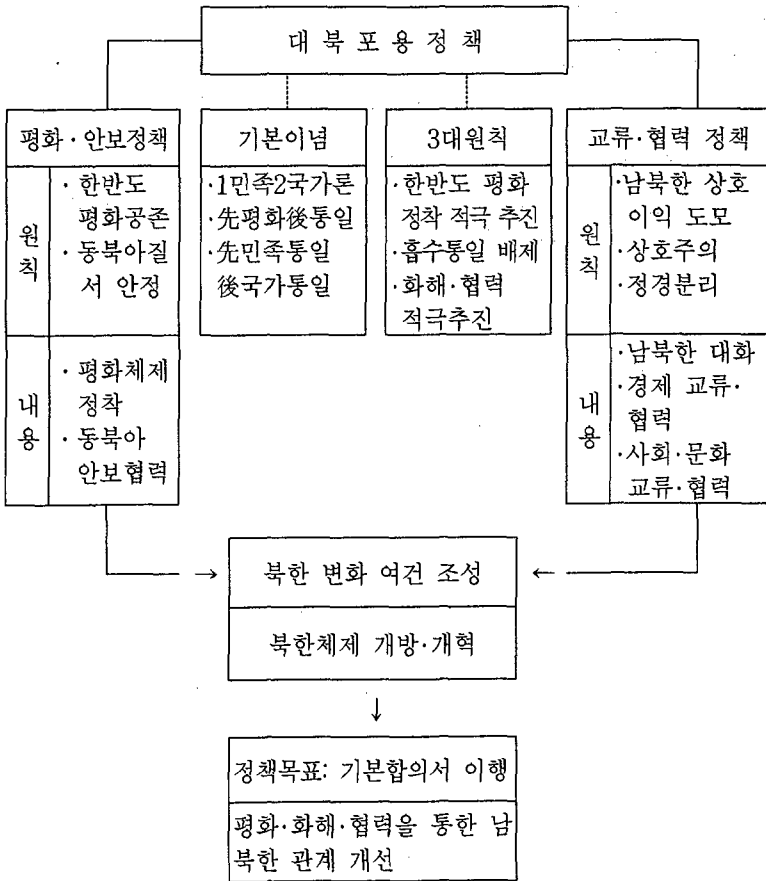
한국정부는 교류·협력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위하여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거나, 북한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치적 양보부문과 연계하는 대북 교류·협력정책은 자제하고 있다. 또한, 남북한간 교류·협력정책 추진시 남북한간의 자유여행 및 접촉 보장, 이산가족 재결합 등 북한당국이 체제위협 요인으로 간주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경제사정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북한동포에게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WFP 등 국제기구의 대북지원에 적극 참여하고, 민간차원에서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 북한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농업개발 협력 및 경협 활성화 등을 통해 북한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도 지원할 것이다.

한국정부는 분단고통의 감소를 위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남북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적 시도를 취하고 있다. 분단 반세기가 지났으나 천만 이산가족들은 이산가족 1세대의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흩어진 가족들의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방북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것이며, 영세 이산가족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교류에 필요한 경비 일부도 지원하는 정책도 취하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북 화해·협력정책은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남북한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공존과 공존공영을 도모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 경우 한국정부는 북한의 유교사회주의적 스탈린주의체제의 비합리적인 자세에 대해서는 의연히 대처하되, 「접촉을 통한 변화」에 입각한 보다 많은 접촉, 보다 많은 대화, 보다 많은 협력을 추진하여 북한의 경직된 체제가 보다 인간적인 사회주의체제로 변화하도록 대북정책을 경주할 것이다.

<부록> 「국민의 정부」 대북포용정책의 구도



<발표요지>

북한의 대남정책

于美華

(東北亞研究室 教授)

- 북한의 통일정책은 공격적인 것에서 방어적인 것으로 자기중심적 전략에서 남북공존 전략으로 변화되어 옴.
 - 50년대: 북한 통일역량 강화론
 - 60~70년대: 선남한혁명 후통일론
 - 80년대: 연방제통일론
 - 90년대: 남북공존 이후 연방제통일

- 북한의 통일방안은 60년대에 '남북연방'이라는 명칭으로 처음으로 제기되었으며, 70~80년대의 고려연방공화국 통일방안을 거쳐 90년대 들어 '1국가, 2체제'의 통일방안으로 구체화되었음.

- 김정일은 김일성의 정책을 유지·계승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서 북한의 대남정책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음.
 - 군사독재정권이 아닌 문민정부, 더욱이 민주투사 출신의 김대중대통령을 상대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사전경험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있음.

- 북한은 김대중대통령의 집권이후 한동안 관망자세를 유지하였으나 최근 들어 대남비난을 재개하고 있음.

16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햇볕정책은 궁극적으로 북한을 흡수하겠다는 정책이다.”
 - “대국들과 공조하여 북한을 상대하고 안기부를 계속 유지하는 등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다.”
 - “김대중정권은 미국에 의존적이고 통일이후에도 주한미군 주둔을 주장하는 등 자주성이 없다는 점에서 김영삼정권 보다 더 나쁘다.”
- 향후 김정일의 대남정책은 한국정부와의 대화를 가능한 회피하면서 남북관계 보다 북·미 관계개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은 엄격한 정경분리 원칙하에서 정부간 교류보다는 민간 교류에 치중하면서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남북정상회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토 론 >

丁奎松 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중국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4자회담이 중요합니다. 지난번 회담에서는 별다른 성과가 없었습니다. 10월에 다시 열리게 되는 4자회담을 성과있게 하기 위한 대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황병덕 박사: 김대중정부의 대북정책이 지금까지는 교류·협력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 북·미 평화협정과 남북 평화협정을 둘러싼 과거 4자회담에서의 논란은 향후 한·미, 북·미, 남북간에 상호 절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 북한이 요구하는 주한미군 철수나 안기부 철폐는 국민정서상 수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주한미군은 체제대립과 민족국가 상호간의 갈등이 상존하고 있는 동북아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춘흠 박사: 4자회담의 전망과 관련, 중요한 것은 북한의 열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4자회담의 주창국이고 중국도 이를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남북관계 보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바, 김대중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 4자회담이나 남북관계의 개선이 없는 한 미·북수교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于美華 교수: 중국은 현재 한반도가 외교적 불균형 상태에 있다고 보기 때문에 북·미 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중국으로서 난감한 것은 북한이 중국의 4자회담 참가를 반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신상진 박사: 우선생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4자회담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황병덕 박사: 북한 대외정책의 핵심은 자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배제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은 한국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미군의 한국주둔을 안보적 방어기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절충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에서는 주한미군 철수라는 북한측 주장이 과연 현실성이 있다고 보는지 궁금합니다.

于美華 교수: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한미군은 역사적 유물로서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는 철수하는 것이 순리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미간 조약의 문제즉, 한·미간 상호의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중국으로서 주한미군이 중국을 적대하지 않는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楊伯江 부교수연구원: 주한미군의 향배는 몇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미국 국내여론의 동향, 주변국들의 전략과 관련된 동북아의 안정여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민족자신의 결정에 의하여 주한미군의 운명이 결정되게 될 것입니다.

김대중정부 이후의 한·미, 북·미관계에 대해 말씀드리면 김영삼정부 시절 보다 한·미관계가 밀접해 진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북·미관계개선에 반대하지 않지만 동시에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하지도 않습니다. 남북관계 우선이나 북·미관계 우선이나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북한은 에너지난 등의 제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식량난은 호전된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현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최고인민회의 이후 북한의 정치적 形勢의 문제인데 ‘勢’(추세)의 차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形’(구조)의 차원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위원회가 정치·경제·군사를 총괄한다는 것을 중국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북한의 경제적 개혁·개방이 가능한가라는 점입니다. 중국학자들이 현재의 북한을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한 20년전과 비교하고 내린 결론은 북한이 개혁·개방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개혁·개방을 시작하기 전에 철학, 과학적 사회주의, 경제학의 전반에 걸쳐 이론적 준비가 되어 있었음에 반하여 북한은 전혀 이론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등소평 선생은 한동안 집권세력의 피해자였지만 김정일은 수혜자이자 계승자라는 점에서도 매우 다릅니다. “낡은 것을 파괴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없다”라는 격언에서처럼 중국에서의 개혁·개방은 낡은 것을 이론적으로나 人事적으로나 뒤엎고 시작했는데 김정일이 그러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황병덕 박사: 북한은 경제적 위기에도 불구하고 금번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사상, 군사, 심지어 경제대국을 지향한다는 강성대국론을 채택하는 기이한 양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당·군관계에서의 우위의 문

제 등 북한의 권력구조에 대한 파악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중국측에서는 사회주의의 경험에 비추어 북한의 현상태를 어떻게 보는지 역으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과 관련, 북한은 전반적으로는 자력갱생을 유지하면서도 내적으로는 자영업을 허용하는 등 소유관계의 변화를 인정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측의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중국의 역할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스탈린체제 국가인 북한의 존재가 동북아 안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중국은 북한이 인간적 사회주의체제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적절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丁奎松 연구원: 북한은 현재 위기관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중국도 문화혁명 시기에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미처 하지 못한 질문과 답변은 오후 두번째 세션에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Session: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사 회: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 발 표: 중국의 대북한정책(신상진 연구위원)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김영춘 연구위원)
클린턴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결정요인(이현경 연구위원)
일본의 대한반도정책(楊伯江 副教授研究員)
동북아와 중·미관계 전망(丁奎松 研究員)
- 토 론: 황병덕(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배(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于美華(東北亞研究室 教授)
戚保良(東北亞研究室, 副研究員)

중국의 대북한정책

-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분석을 중심으로 -

신상진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서언

서방세계의 예측과는 달리 김일성 사후에도 북한에서는 김정일의 통치하에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내적으로 심각한 식량난과 에너지난 그리고 사회일탈 현상을 겪고 있다. 따라

서 북한 김정일은 '병영통치'라는 비정상적인 방식을 통해 북한을 영도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국방위원회 위원장에 등극함으로써, 김정일은 명실상부하게 군을 통치수단의 핵심으로 삼게 되었다고 하겠다. 1998년 8월 31일 소형 인공위성을 탄도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하였던 것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김정일에 대한 북한주민의 지지도를 제고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대미·일 관계개선에 진전을 보지 못하는 등 고립상태에 처해 있다. 북한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야만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가능하고 자신의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다는 논리를 주장하면서,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해 왔다. 따라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까지도 대미관계 개선 등 대외적 용도로 활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대내외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여, 북한은 제한적인 개방을 통해 생존을 모색하고 있다. 10기 1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도 북한은 개인 소유의 폭을 넓히고 텃밭경작을 허용하는 한편 거주와 여행의 자유를 허가하는 등 부분적이지만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 잠수정 침투와 탄도 미사일 발사 및 수출 등 돌출행위를 중단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조약을 유지하면서 북한에 대해 정치·경제적 지원을 통해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보유하려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1960년대의 교훈을 거울삼아 내정불간섭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원칙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한반도 주변 4강중 중국이 북한에게 정책변화를 설득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향후 북한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 유도하는데 있어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1990년대 중국이 북한을 어떠한 상대로 인식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 4자회담,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 주한미군 문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의 대북한정책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대북한 인식

1990년대에 들어 중국은 북한을 체제유지 지원대상, 전략적 협력 대상으로 인식하는 동시에 자국에게 부담을 주는 국가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이 가속화되고 북한의 경제난과 대외고립이 심화될수록 중국은 북한을 혈맹 또는 우호협력 대상으로 보다는 부담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 체제유지 지원 대상

한반도는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동북3성 지역과 접경하고 있는 바,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한반도에서 심각한 불안정 국면이 조성될 경우, 중국은 즉각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반도간의 관계를 「순치관계」(唇齒關係)로 간주하여 왔다. 1950년 중국이 한국전에 참전하였던 이유중의 하나도 중국에게 있어서 한반도가 가지는 안보전략적 중요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¹⁾ 중국은 적어도 한반도의 북측지역이 자신의 세력범위 내에 있기를 바라왔다.

1990년대에 들어서도 한반도, 특히 북한에 대한 중국의 안보전략적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 한국과의 수교이후 중국은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보다 한국을 중시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정치·군사적 측면에 있어서는 북한을 우선시하였다. 중국은 소위 「정경분리정책」(政經分離政策)을 통해 한반도에서 최대한도의 국익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1) 중국은 미국이 38선을 넘어 중국의 국경지역까지 진격하여 중국에 위협을 가함으로써 국가보위를 위해 한국전에 개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周恩來選集」, 上卷(北京:人民出版社, 1984), p. 52.

중국이 여전히 정치·군사적으로 북한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 붕괴의 위험성과 이것이 중국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이다. 1990년 동독이 서독에 의해 흡수통일된 후 1년여만에 소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의 지도자들에게 심각하게 인식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동유럽과 소련에서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는 등 사회주의체제가 수세에 몰린 상태에서 긴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봉착하게 될 경우, 이는 중국의 체제안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소위 「蘇東波」(소련과 동유럽 체제붕괴의 파고)가 동아시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고, 2) 이를 위해 일차적으로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대외적 고립심화가 북한 지도부로부터 하여금 절망에 빠지게 함으로써 비이성적 행동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이는 중국 자신의 경제발전과 체제안정에 결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지속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3)

1990년대초 이래 중국에 대한 미국의 「화평연변」(和平演變)정책 4)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지원정책

2) 1990년대 초기 중국에서 전개된 「蘇東波」 논쟁에 대해서는 張雅君, “蘇聯變局對中共的衝擊: 危機效應的分析,” 「中國大陸研究」, 第34卷 第11期 (1991. 11), pp. 6~20; 段若非, “堅持人民民主專政, 反對和防止和平演變,” 「人民日報」, 1991. 6. 5 참조.

3) 吳建民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한·중 국교정상화 조인식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평화공존 5원칙에 입각해서 북한과의 선린우호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북한과의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폐기 또는 개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文匯報」(香港), 1992. 8. 24.

4) 중국은 「和平演變」정책을 공산국가에 대한 봉쇄정책이 한층 발전된 형태라

을 지속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동유럽과 소련 사회주의 붕괴이후 미국이 인권문제와 대만문제 등을 구실로 잔존 사회주의국가에 대해 각종 압력을 강화하자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자국의 사회주의체제 안정에 대한 완충지대로 간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중국이 자국의 변경지역에 위치한 북한을 사회주의 형제국 또는 전통 우호협력 대상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인식에 바탕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⁵⁾

2. 전략적 협력대상

북한은 여전히 중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북한은 중국의 수도인 北京에서 가장 가까이에 위치한 지역으로써 중국의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이 자국에 우호적이거나 적어도 중립적이기를 바라고 있다. 즉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 범위내에 묶어 두고자 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한국정부의 대북 영향력 행사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정치·경제적 양보를 받아내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북한과의 긴밀한 관계를 지속

고 간주한다. 중국은 「和平演變」정책을 군사력 이외에 경제수단이나 외교와 인권문제를 이용하여 사회주의체제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다. 梁云彤 等, 「美國和平演變戰略」(瀋陽: 吉林人民出版社, 1992) 참조.

5) 한·중수교 이후인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중국의 대외정책 방침이 천명된 「政府工作報告」에서 李鵬 총리는 중국이 북한과 전통 우호협력관계를 지속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李鵬在人大政府工作報告,” 「文匯報」, 1993. 4. 1.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수교 이후에도 정치·안보적 측면에서는 한국보다도 북한을 우선시하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을 전략적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있어서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 점은 미국요인이다. 1990년대 들어 중국은 미국의 압력에 대처하기 위해 주변국과의 선린우호관계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 바, 특히 중국의 유일한 동맹조약(「우호협조 및 상호 원조조약」) 체결국인 북한은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과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처하려 하고 있다.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간 체네바 핵기본합의를 계기로 관계개선 조짐이 일어나자 중국이 한국카드를 활용하여 미국과 북한의 접근을 견제하고자 하였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의 대북 접근정책도 중국의 대북 인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북한은 1991년부터 1년여 동안 수교교섭 협상을 전개하여 관계개선 문제에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는 바, 양국간 관계정상화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중국으로서는 일·북관계 진전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중국은 일본의 대북한 진출이 궁극적으로는 대중 안보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⁶⁾ 북한을 자국의 영향력하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북한과의 전략적 우호협력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려 하고 있다.

6) 중국은 19세기말부터 한반도가 일본의 대중침략의 징검다리로 활용되어 왔다고 인식하여 왔다. 解力夫, 「朝鮮戰爭實錄」, 上卷(北京: 世界知識出版社, 1993), p. 159; 陸俊元, 「朝鮮半島的地緣戰略結構及其演化」, 「現代國際關係」, 1996年 第9期(1996. 9), p. 33.

3. 경제·정치적 부담요인

경제건설을 최우선적 국가정책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중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부담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2월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개최된 12차 당대회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건설을 당의 공식 방침으로 확정하였고, 1997년 9월 15차 당대회에서도 자본주의 경제요소 도입정책을 더욱 적극화하였다. 따라서 경제적 이익에 입각하여 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고자 하는 중국에게 있어서 경제침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은 결코 가까이 하고 싶은 대상이 될 수 없다. 북한과의 경제교류는 중국에게 이익이 되기 보다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중국이 강조하는 대북 우호관계는 실질보다는 명분과 형식에 치중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중국의 입장을 난처하게 하고 있다. 1993년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선언으로 북한 핵문제가 유엔 안보리에 상정되어 북한에 대한 제재논의가 전개되었을 때, 중국은 국제사회의 기대와 달리 중립적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다. 중국은 자국의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는데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었는 바, 북한의 핵무기 개발정책으로 야기될 수 있는 동아시아질서의 불안정은 중국에게 결코 이롭지 못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여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조치 행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가 북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중국은 심각한 경제난과 대외고립 상태에 처한 북한을 살리기 위해 많은 희생과 댓가를 치루고 있다. 중국은 북한을 자국의 경제개혁·개방정책과 대외정책 추진에 대한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다.⁷⁾

Ⅲ.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과 정책

1. 경제지원문제

중국은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되어 체제불안이 가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북한 내부의 혼란이 심화될 경우, 접경지역인 중국의 동북3성지역의 안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생존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하고, 북한을 자신의 영향력하에 두려 하고 있다. 중국은 최소한도의 경제지원을 통해 북한을 자신의 우호세력으로 묶어 두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KEDO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이 기구가 사실상 미국의 주도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KEDO에 참여하지 않은 또다른 이유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이 기구에 참여하게 되면 북한이 한국 및 미국과의 교섭에서 수세에 처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은 대북 경제지원을 독자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대북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식량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야 하는 상황(1995년 1,100만톤 부족)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 상당한 규모의 식량을 제공해 주고 있다.⁸⁾ 1995년 이후 북한이 수재와 가뭄으로 심각한 식

7)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계 학자인 易小熊(Xiaoxiong Yi)도 이러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China's North Korea Policy: A Waiting Game," 민족통일연구원 세미나 발표자료(1997. 9. 24)

8) 북한에 대해 중국이 정확하게 얼마나 식량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는 외부에

량난을 겪게 되어 체제위기 상황이 고조되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식량원조를 확대하고 있다. 1995년 중국은 10만톤 이상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 제공하여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년의 경우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대략 250만톤 정도로 알려진 가운데 중국은 북한에 50만톤(무상원조분 12만톤 포함) 이상의 식량을 제공해 주었는데, 이는 북한의 식량난 해소 등 북한체제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1997년에도 중국은 북한에 두차례에 걸쳐서 15만톤의 식량을 무상으로 제공해 줌으로써 북한의 식량난 해소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⁹⁾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되는 식량중 상당량은 무상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물물거래나 현금거래 또는 비공식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부분을 포함할 경우 연간 50만톤 이상의 중국 식량이 북한으로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¹⁰⁾

1998년 역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식량원조 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4월 吳邦國 부총리는 10만톤의 곡물과 2만톤의 화학비료를 북한에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95년 중국은 북한에 대해 10만톤의 식량을 제공하였다고 공식 밝힌 바 있고, 1996년에는 12만톤을 제공했다고 공표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식량지원 이외에 중국정부의 비공식 지원 규모와 국경지역에서 밀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식량 공급량을 포함할 경우, 1996년 중국에서 북한으로 유입된 총식량 규모는 약 70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관련, 1996년 중·북간 변경무역 규모가 전년대비 645% 증가한 1억 1천 9백만달러에 달하였으며, 중·북간 전체 교역액중 변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 2.9%에서 21.1%로 대폭 확대되었다. 「연합통신」, 1997. 3. 18.

- 9) 중국은 1997년 4월 12일 북한 주재 萬永祥 중국 대사를 통해 북한에 쌀 1만톤과 옥수수 6만톤 등 총 7만톤의 식량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고, 1997년 7월 14일에도 8만톤의 식량을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공개하였다. 「내외통신」, 보도판, 1997. 4. 15, 7. 16; *The Japan Times*, July 9, 1997.
- 10) 일본과 국내 보도매체들은 1996년 5월 북한 홍성남 부총리 중국방문시 중국이 북한과 「경제기술협력협정」을 체결하여 2000년까지 연간 50만톤 정도의 식량을 북한에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중앙일보」, 1996. 6. 6; 「毎日新聞」, 1996. 7. 18.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특히 이는 남북한 정부대표가 北京에서 대북 경제지원문제를 논의한 시점에 공개되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1992년 이래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원유수출 중단정책이 북한의 에너지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었고, 중국이 북한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이 되었다. 중동의 리비아가 북한의 무기와 물물교환 형식으로 제공하는 소량의 원유를 제외할 경우, 중국의 대북한 원유 제공은 북한의 생존에 가히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부터 1996년까지 중국은 매년 북한에 대해 약 100만톤 정도의 원유를 제공함으로써 북한의 에너지 공급에 결정적으로 기여해 왔다. 특히 1994년 중국의 대북 원유공급량이 다소 감소되다가, 미·북관계 개선 방침 발표이후인 1995년부터 예년의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1997년 6월 劉山在 중국 대외무역경제합작부 부부장의 평양 방문시 중국은 북한과 2천만원(인민폐) 상당의 원조물자 제공협정을 체결하였는데,¹¹⁾ 북한의 사정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물자가 원유와 유연탄으로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1998년 중국 최대 유전지역인 大慶유전이 대홍수로 인하여 침수됨으로써 원유생산량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에서도 중국은 8만톤에 달하는 원유를 북한에 무상지원하였다.¹²⁾ 1996년부터 북한은 원유도입을 중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제공은 북한의 에너지난 해소에 다소 도움을 줄 것이다.

11) 「내외통신」, 보도판, 1997. 7. 16.

12) 1,000개에 이르는 유전이 침수되었으나, 침수된 유정 대부분은 채유량이 많지 않은 유정으로 알려지고 있다. 大慶유전중 가장 채유량이 많은 지역인 長垣분지의 유정들은 홍수피해를 전혀 받지 않았다. 중국은 홍수피해로 인한 원유 감산량은 2%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공식 발표하고 있다. 「明報」, 1998. 10. 20.

2. 4자회담문제

4자회담 제의 초기 중국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국이 4자회담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보인 이유는 첫째, 4자회담이 미국의 주도하에 제의되었고,¹³⁾ 둘째 북한이 4자회담 자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이었으며, 셋째 북한이 중국의 참여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6년 9월 강릉 잠수정 사건이 발생하여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고 동년 11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태경제협력체」(APEC) 비공식 지도자회의에서 중·미 정상간에 관계개선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결국 1997년 북한이 4자회담 공동설명회, 예비회담 및 본회담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하자, 중국도 기존의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4자회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중국은 강릉 잠수정사건으로 남북한간 긴장이 고조되자 한반도의 평화정착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되어 4자회담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다. 중국은 4자회담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발언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4자회담 예비회담과 본회담에 陳健 외교부장 助理와 唐家璇 외교부 부부장 등 외교부내 비중있는 인사를 대표로 파견하였다. 뉴욕 4자회담 예비회담 개최직전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한반도 정전협정 당사국이며 주변국가기므로 4자회담 참여에 동의하며, 새로운 평화보장체제 수립과정에서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는 바,¹⁴⁾ 이는 중국이 4자회담

13) 4자회담은 1996년 4월 제주도에서 한·미 정상의 공동 성명문을 통해 제의되었으나, 실지로는 미국이 주도적으로 제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북 4자회담 제의 배경,” 『東亞日報』, 1998. 8. 25.

14) 4자회담 1차 예비회담시에도 陳健 대표는 중국이 4자회담에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人民日報』, 1997. 8. 9.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중국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자세가 변화되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이 4자회담을 대미관계 개선의 장으로 활용하려 했기 때문이었다. 1996년 11월 마닐라 「아태경제협력체」 비공식 지도자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중·미정상회담에서 江澤民과 클린턴은 연례 정상회담을 양국 수도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을 위해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의 협력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대만문제를 둘러싸고 촉발된 대미 긴장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 하나인 한반도문제에 대해 미국과 공동 보조를 취함으로써 미국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확보하려 하였던 것으로 분석된다.¹⁵⁾

북한이 당초의 태도를 바꾸어 4자회담 설명회, 예비회담 및 본회담 참석을 수용하게 되었던 점도 중국으로 하여금 4자회담 지지 입장을 표명하도록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북한과 전통 우호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하고자 하였던 중국은 4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표하더라도 북한에게 비난의 소지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1997년 3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4자회담 진행과정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행사하였다. 4자회담 설명회가 남북한과 미국 사이에 개최되었을 때, 중국 외교부는 “4자회담 설명회가 4자회담 실현에

15) 1996년 11월 마닐라 중·미 정상회담 직후, 윈스턴 로드 미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4자회담이 성사될 경우 중국이 이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천명하였다. 이는 중·미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4자회담 참여를 대미 관계개선의 지렛대로 삼으려 하였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조선일보」, 1996. 11. 25.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바란다”면서 4자회담에 대한 지지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하였다.¹⁶⁾ 4자회담 설명회 직전인 1997년 3월 1일 개최되었던 8기 全人大 5차회의시 발표된 「政府工作報告」에서 중국은 한반도정책의 중점을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둘 것이라고 밝혔는 바,¹⁷⁾ 이 점도 4자회담에 대한 중국의 지지 입장을 간접적으로 대변한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4자회담 2차 본회담시까지 중국은 관련 각국이 평등하게 참여해야 하며(平等相待), 합의가 어려운 문제는 덮어두고 공통점을 지향하고(求同存異), 인내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循序漸進)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향후 중국은 남북한에 대해 내정간섭으로 비취질 수 있는 오해 소지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구상을 주도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제시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또한 중국은 4자회담이 참가국의 평등한 참여에 의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발언권을 최대한 확보하려 할 것이다. 아울러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에 중립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최대한의 이익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3. 탄도미사일 발사문제

1998년 8월 31일 북한은 탄도미사일에 소형 인공위성을 탑재하여

16) 「人民日報」, 1997. 3. 6.

17) 李鵬, “政府工作報告,” 「文匯報」(香港), 1997. 3. 16. 매년 연초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의회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당해 연도 중국의 대내외 정책방향이 공표된다.

시험 발사하였다. 북한은 ‘광명성 1호’ 인공위성이 지구궤도를 100여 바퀴나 돌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과 미국정부는 북한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는 했지만 지구궤도에는 올려놓지 못했다고 결론짓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였든 인공위성을 발사하였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수준이 이미 상당한 정도에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일본 전역과 미국 하와이 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안보위협을 받게 되었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안보에 심각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일본이 「전역미사일방어체제」(TMD) 구축을 앞당기고 자위대 전력증강 움직임을 구체화하고 있는 점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군사력 증강의 구실로 삼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방위예산으로 매년 약 500억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향후 동아시아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것이다.

또한 1997년 9월 미·일이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하였는데, 양국은 여기에서 ‘일본주변 유사시’ 안보협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미·일은 중국의 반발을 고려하여 ‘일본주변 유사시’를 지역적 개념이 아니라 상황적 개념이라고 규정하였지만, 대만해협 문제와 한반도문제는 ‘일본주변 유사’ 범위에 포함될 수 밖에 없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도 일본의 안보에 위협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광역적인 차원에서 ‘일본주변 유사시’에 해당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미·일간 방위협력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일간 방위협력 강화는 곧 중국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일간 군사동맹 강화는 중국에게 이들 양국이 공동으로 동아시아질서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대만해협에서 긴장이 고조되었을 때 미·일이 협력하여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동아시아 안보환경 변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지대하다. 따라서 중국은 이 문제가 가능한 한 관련국간 대화를 통해 해결됨으로써 지역안정과 평화유지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일부 서방국이 주도하여 북한 미사일문제를 유엔안보리에 상정하려 하였을 때, 중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반대한다면서 유엔안보리 상정을 반대하였다.¹⁸⁾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발사 문제가 국제적인 사안으로 부각되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난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하여 미·일간 안보동맹이 강화되고 중국과 미·일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미·일 군사교류·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 10월 江澤民 주석의 미국방문 이후 중·미간 군사교류·협력 확대 기반이 마련되어, 1998년에는 코언 미 국방부장이 중국내 군사기지를 방문하였고, 張萬年 중국 당중앙군사위 부주석과 王克 총후군 부장 등 중국군 수뇌부가 미국내 군사기지를 방문하였다. 특히 張萬年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의 미국방문시에는 군사환경보호 관련 정보교류를 진행하기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등 군사교류·협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데 합의하였다.¹⁹⁾ 1996년 미·일 신안보공동

18) <http://www.insidechina.com/china/news/01.html>, September 9, 1998.

19) 『人民日報』, 1998. 9. 17.

성명 발표이후 중국은 일본과도 안보교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1998년에는 遲浩田 국방부장과 후미오 규마(久間 章生) 일본 방위청 장관이 상대국 해군기지를 상호 교환방문하였다.²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일본의 군사력 증강과 미·일간 안보관계 강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중국은 앞으로도 이들 양국과의 군사교류·접촉을 확대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문제와 관련해서도 미·일에 대해 협력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와 지역안정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미·일의 대북한 제재나 무력수단 행사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될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문제로 인하여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동 문제가 관련국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될 것이다.

4. 주한미군문제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존재하였을 당시 중국은 한반도 등 동아시아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미군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 간주하였다. 중국은 역내 미군이 소련의 남진을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측면도 있다고 판단하여, 역내 미군주둔을 용인하였다. 중국은 「이이제이」(以夷制夷) 원칙에 입각하여 최대 적대국으로 간주되었던 소련의 팽창에 대처하기 위해 덜 위협스럽게 여겼던 미국을 이용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였던 것도 이러

20) 이를 통해 중·일은 합정의 상호 교환방문에 합의하였으며, 자위대 통합막료회의 의장과 중국군 총참모장의 교환 방문, 방위연구소와 중국 국방대학간의 연구교류 및 군사의료 교류를 확대한다는데 합의하였다.
<http://www.cdn.com.tw>, April 27, 1998; 「文匯報」(香港), 1998. 9. 17.

한 전략적 판단에 기인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들어 소련이 붕괴됨으로써 북방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대폭 감소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미군에 대한 중국의 인식에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중국은 역내 미군을 지역안정 유지세력으로서 보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세력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역내질서가 대체적으로 안정과 평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 군대가 동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중국은 원칙적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에서 미군이 철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된 이후에는 미군이 중국과 직접 대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한반도에 더 이상 주둔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이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고 있지만, 내심으로는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지역안정과 중국의 안보이익에 반하는 것으로만 보지는 않고 있다. 중국이 당분간 한반도에 미군주둔을 용인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은 주한 미군이 한반도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반도정세가 동아시아 지역정세 안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미군이 남북한간 무력대결 발발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둘째, 중국은 대미관계를 고려하여 한반도내 미군철수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미국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보다 자유로운 활동영역을 확보하고 대내 경제건설에 전력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바, 한반도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국은 주일미군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도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견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아시아의 안보를 독자적으로 보장하기 보다는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을 통해 유지해 나가려 하고 있는 바, 주한미군의 철수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한미군이 중국의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을 미치지 않는한 즉각적인 철수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향후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자세는 중·미관계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중·미관계가 개선되고 일본의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가시화될수록 중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용인하게 될 것이나, 중·미관계가 악화되고 일본 자위대에 대한 중국의 위협인식이 낮을수록 중국은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일 것이다.

IV. 결어

1997년 7월 태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아시아 전역에 파급됨으로써 동아시아가 세계경제 발전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지역이라는 평가가 퇴색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아시아 '네 마리 용'(四小龍)의 하나로 간주되었던 한국도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체제 하에 놓이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은 모든 국력을 경제구조 조정을 통한 대내 경제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 20년 동안 연평균 9.8%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1998년 전반기에도 7%에 이르는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 역시 경제건설을 위해 한반도를 비롯한 주변환경의 안정유지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군사적 수단을 통해 대내외 문제를 해결하려는 북한의 모험적인 행동들은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국가들에게 안보위협을 미치고 있다. 즉 최근들어 북한은 불가피하게 부분적인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동북아지역 안정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의 불가예측적인 행동은 동아시아 국가들이 경제건설에 매진하는데 장애가 되고 있다.

따라서 지리적으로 북한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중국과 한국은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기 위해 상호 협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동아시아의 책임있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정에 응분의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 특히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4자회담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계속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북한이 안정속에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최소한도의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하되, 북한이 원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군사력 증강을 기도하는데 대해

서는 한·미의 입장에 적극 지지·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자세는 한·중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유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김영춘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의 안정이 자국의 안보에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한반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일본은 한반도를 아시아 대륙으로의 진출경로 혹은 아시아 대륙으로부터의 외부세력 침투를 막기 위한 완충지대로서 중요시하여 왔고, 이에 따라 한반도에서 정치·경제 및 안보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여 왔다.

최근 일본은 냉전체제 붕괴 및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구축」(1992) 및 「미·일 신안보공동선언」(1996)을 계기로 국제적 역할증대 및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변화는 한국의 안보 및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기초를 분석·검토하고 냉전이후 시대 일본의 대한반도 진출정책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II. 冷戰時代 韓·日關係 變化과정

1. 戰後 冷戰時代(1945~1969): 韓·美, 美·日 安保協力관계

냉전시기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범주 내에서 전개되어 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소냉전이 심화되자 미국은 西方陣營의 지도국으로서 서방진영을 결속시켜 소련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을 「반공의 장벽」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점령정책을 일본경제부흥정책으로 전환하였다. 미국은 일본을 미국의 방위체제 및 군사전략 하에 編入시키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한국전쟁을 契機로 한·일간에 미국을 매개로 한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가 형성되었다.

한·일간 간접적인 군사·안보적 협력관계와 관련된 합의는 1960년 미·일 안보조약의 「극동조약」에 명시되어 있다. 미·일 안보조약 제6조는 “일본의 안전에 기여하고 극동의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공군 및 해군이 일본에 있는 시설 및 구역을 사용할 수 있다”¹⁾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극동조항」이 상정하고 있는 극동 유사시의 지리적 및 전략적 범위에 한반도가 포함되어 있다.

1960년대에 들어서서 한·일교섭은 활발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이것은 미국의 관심이 아시아에서 크게 증대하였고, 한·미·일 3국의 이해가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국제정세적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이 1964년 10월 핵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아시아에서 팽창세력으로 浮刻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중국의 핵실험으로 정치적(위협세력), 그리고 심리적(핵알레르기 반응)으로 불안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자민당 내에서는 1964년 기시(岸), 사토(佐藤), 이시이(石井) 등이 주도하여 아

1) 「朝日新聞」, 1960. 6. 23.

시아연구소를 설립하고 이는 일본의 안보노선은 중국의 팽창을 牽制하고 한국, 자유중국, 그리고 미국과 긴밀한 紐帶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 1960년 초에는 이미 서구와 일본의 대외준비고는 미국과 맞먹는 것이 되었고, 반면에 미국의 金보유고는 1948년의 244억 달러에서 1959년 말에는 195억 달러로 감소하여 미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였으며, 소위 Triffin Dilemma에 놓이게 되었다.²⁾ 일본의 경우 이케다(池田) 수상의 국민소득 倍增政策에 의한 과잉투자와 구조적 불황으로 인하여 아시아의 시장이 요구되었다.

한국은 60년도에 사상 처음으로 미국원조가 2억 달러를 넘지 못하고 감소하자 경제발전을 위해 대일 청구권자금과 일본자본의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60년도의 상황적 변화에 의하여 한·일 회담은 한·미·일 3국의 이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수교결과를 導出하였다.³⁾

일본은 한·일 국교수립(1965.6.22) 이후 정치·안보·경제적인 면에서 한국과의 유대를 堅持하는 韓國一邊倒政策을 취하였다. 이러한 일본의 입장을 반영하여 1969년 11월 22일 「닉슨-사토 공동성명」 제4항에서 미·일 양국은 “한국의 안전은 일본의 안전에 緊要하다”는 소위 「한국조항」에 합의하였다.⁴⁾

북한은 한·미·일 3각군사동맹이 형성되었다고 보고 일본에 대하여 적대적인 자세를 堅持하였으며, 일본도 한국일변도정책에 따라 북한을 인정하지 않는 정책을 취하였다.

2) Robert Triffin, *Gold and Dollar Crisis: The Future of Convertibility* (New Haven, Conn.: Yale University Press, 1961) pp. 3~14. 만약에 미국이 국제수지 균형을 엄격히 유지할 경우 세계금융준비의 원천인 달러가 고갈되어, 유동성의 부족으로 국제거래가 침체될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이 국제수지적 자정책을 계속 시행할 경우 미국의 금재고량을 초과하는 달러의 해외과잉보 호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금과 달러의 위기를 동시에 몰고 온다는 것이 Triffin Dilemma이다.

3) 김영춘, “수교협정이후의 한·일관계,” 『국제정세』, 1990.7. p. 80.

4) 日本外務省編, 『外交靑書: わが外交の近況』, 1969年, p. 400.

2. 데탕트時代(1969~1979): 日本의 對北接近 試圖

미국은 1969년 닉슨 독트린을 선언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중·일과 連繫하여 소련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 있다.

미국이 아시아로부터 역할감축을 公式化하고 한국 및 일본에 대한 방위공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일본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안정 및 자국의 안보를 위하여 독자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더욱이 미·중 화해로 동북아에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일본은 보다 자주적인 외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여유를 얻게 되었다.

한·일 정상화이후 韓國重視政策을 펴왔던 일본의 외교정책은 1970년대에 진입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 1월에 열렸던 닉슨·사토회담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이다. 사토회담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조항은 사실상 소멸된 것이나 다름없고 당시의 해석을 固定的으로 생각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으며, 사태인식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⁵⁾ 이러한 맥락에서 1971년 11월 日朝議員聯盟이 결성되었고, 중·참의원 약 240명이 가입하였다. 그 이듬해에는 구노쥬지(久野忠治)가 일·조의원 13명을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여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1975년 「포드·미키 공동선언」에서는 「한국조항」의 한국을 「한반도」로 대체하려는 일본의 입장이 수용되어 “한국의 안전이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긴요하며 또한 한반도의 평화유지는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안전에 중요하다”고 하는 「신한국조항」으로 代替되었다.⁶⁾

5) 「朝日新聞」, 1972. 1. 8.

6) 이러한 「신한국조항」은 한반도에 있어서도 데탕트구조가 실현가능하다고 하는 명분하에 「한국의 안전」, 「한반도의 안전」 등으로 구분하여 「두개의 한국 정책」을 취하기 위한 일본의 준비작업의 일환이었다.

그러면 왜 일본은 1950~60년대 한국일변도정책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펴고 있는가. 첫째는 1971년 닉슨의 방중과 이에 따른 미·중관계 개선, 즉 동북아 데탕트체제가 도입되면서 한국안보는 곧 일본안보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며, 둘째는 7·4 공동성명에서 한국정부가 북한정부를 사실상의 정부로 인정하자 일본은 政經分離政策을 들고 나와 비정치분야에서 북한과 관계를 맺으면서 남·북한 등거리 외교를 추구했다고 보여진다.

3. 新冷戰體制(1979~1980年代 중반): 韓·美·日 安保協力 강화

1980년대에 들어오자 노신영 외무장관은 한·일 외상회의(1981년 8월)에서 안전보장문제와 경제협력문제를 결부시켜 제5차 경제사회개발계획(82~87)을 위해 60억 달러의 정부차관을 일본에 요청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경제협력이 방위비에 代替될 수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양측은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였다.

왜 한국은 일본의 경제협력을 요청하였는가. 중요한 배경은 80년대 동북아 기류가 신냉전체제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80년대에 들어서자 국방비의 지출을 증가(약 15%) 시켰는데, 이 증가가 극동아시아에 상당부분 집중되었다. 반면에 미국은 베트남신드롬 때문에 아시아에서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련군의 작전해역이 동해까지 확대되자 한국은 한국의 안보가 일본방위에 直結된다는 논리로 경제협력을 요청했다고 볼 수 있다.

신냉전시기 일본정부는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에 따른 미국의 역할분담 요청에 부응하여 미국의 정치·경제적 헤게모니를 지원하기 위한 재정후원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일본은 「총합안전보장원칙」에 의거 외국원조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및 주변국에서 안보이익과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을 중요한 원조대상국으로 인식하였으며, 나카소네 수상의 공식 방한(1983.1.11~12)시 40억 달러의 안보경제자금을 제공하였다.⁷⁾

한·미·일 안보유대 강화의 一環으로 한국군, 일본자위대, 주일·주한 미군의 무기 및 장비가 급속히 증강되었으며, 일본은 소련의 위협증대에 對處하기 위하여 1970년대 專守防衛戰略으로부터 1,000해리 해상수송로 방위를 위한 적극적인 地域防衛戰略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新냉전 추세에 따라 대북한 접근을 자제하고 한국과의 안보 및 경제유대를 강화하였다. 신냉전시대 일본은 동맹국과의 안보유대를 강조하는 미국의 대한반도정책에 부응하여 對北韓 접근정책 보다 한국안보를 우선 시하는 정책을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한국과의 우호협력관계를 유지·증진하고, 북한과는 경제, 문화 등의 교류를 서서히 증대해 나가는 것이 적당하다”⁸⁾고 밝힘으로써 국제 및 한반도 상황이 호전되면 다시 대북접근정책을 추진해 나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7) 한영구, “한국 대일 외교의 방향과 과제,” 『국제정세』, 2월 5호(1990년 5월), pp. 60~65.

8) 日本外務省, 『外交青書:わが外交の近況』, 1981年, p. 18.

Ⅲ. 冷戰以後時代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

1. 東北亞 및 韓半島情勢 變化

냉전이후시대 세계 및 동북아정세는 냉전시대와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소양극 체제로 대표되는 냉전구조가 붕괴되었고 소련을 계승한 러시아 연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둘째, 「미·일간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1992) 및 「미·일 신안보공동선언」(1996)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냉전이후시대 국제정세 변화를 배경으로 일본은 미국의 지원하에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킬 가능성이 높다.

고르바초프등장과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은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는 바, 북방정책의 성공은 한반도에 대한 러·중의 영향력 증대를 가져왔다. 이에 대해 일본은 한반도에서 러·중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자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북한 수교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 對韓半島 獨自的 影響力 確保

가. 北·日關係 正常化 追求

일본은 국제질서 및 동북아 질서 변화, 미·일간의 세계적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역할증대, 그리고 남한의 북방정책 성공 및 북한의 대일접근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독자적인 영향력 확보를 위하여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정하였다.

일본은 노태우 전대통령의 「7·7선언」(1988. 7. 7)과 1990년 6월 한·러수교가 발표되던 거의 같은 시기인 9월 일본 제18후지산호 선원 석방문제의 해결과 일본의 전후처리문제의 하나로 남아 있는 대북한 관계개선을 추구하기 위해 자민·사회 양당 대표단(단장: 가네마루 신)을 평양에 파견(1990. 9. 21~28), 수교교섭을 시작하였다.

나. 北·日 修交交渉 現況

북·일 수교교섭은 1990년 11월과 12월 3회에 걸친 예비회담과 1991년 1월과 1992년 11월까지 8차에 걸친 회담에서 논의되어 왔다. 이 수교교섭 과정에서 현안은 북한핵문제, 보상·청구권문제, 이은혜문제 등이었다.

8차에 걸친 양국간의 수교교섭 과정에서 나타난 양국의 입장을 비교하면 첫째, 수교원칙의 면에 있어서 일본은 「선 현안타결 후 수교」를 주장하는 반면, 북한측은 「선 수교 후 현안타결」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둘째, 핵문제에 관하여 일본측은 북한핵문제의 해결 없이는 수교교섭의 실질적인 진전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명하는 반면, 북한측은 핵사찰 문제는 북·일간의 교섭사항이 아니라고 반론을 제기하였다. 셋째, 전전(戰前)과 전후(戰後)에 대한 보상문제에 관해서도 일본은 전전(戰前)의 식민지 통치기간밖에 보상할 수 없으며, 그 피해는 재산청구권 방식으로 처리해야 함을 주장하는 반면, 북한측은 서독정부가 구나치들에 의한 유대인학살 범죄행위를 보상한 것처럼 북한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전·후를 총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넷째, 대한항공 격추사건 범인에게 일본어를 가르쳤다고 하는 일본여성의 신원파악 문제에 대하여 일본측은 교섭의 지속을 위해서는 신원확인이 전제라고 강조하는 반면, 북한측은 이 문제는 북·일간의 수교교섭과

전혀 관계도 없으며 이는 남한측의 허위날조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회담은 결렬되었다.⁹⁾

이상과 같이 북·일간의 수교교섭 과정에는 양측간에 적지 않은 인식의 차이점과 정책상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수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비례하여 상기 4가지 문제점에 관한 양측의 상황인식은 적지 않게 변화 또는 수정된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핵문제에 관한 북·미간의 1994년 제네바합의는 양측의 핵인식을 새로이 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북·일양국의 내적변수에서 볼 때 북·일교섭의 타결은 36년간의 일제통치에 대한 보상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의제로 볼 때 대립점이 되었던 북한의 관할권 문제와 식민지시대 항일무장투쟁에 따른 전쟁배상, 그리고 전후 45년간에 대한 보상은 북한이 이미 일본에 양보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재개되는 교섭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연립여당(사회·자민·사키가케) 방문단은 1995년 3월 30일 북한노동당과 북·일 수교교섭 재개를 합의하였는데 이는 1990년 자민·사회·노동당에 의한 3당 공동선언에 의해 북·일 수교교섭이 시작되었다는 사실만 언급, 3당 공동선언에 명기한 「일본이 한국과만 국교를 맺음으로써 북한이 본 피해도 보상한다」는 이른바 전후보상문제는 의제에서 다루지 않기로 하였다. 그런 점에서 보상·청구권 문제는 북·일수교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항이라 하겠다.

1997년 11월 11일 일본의 자민, 사민, 사키가케 등 여당 대표단으로는 2년 8개월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입국하여 일본인 납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일본인처 후속방문 문제에 대하여 거론하였다.

9) 그러나 일본측은 1992년 11월 5일 북경에서 개최된 제8차 회담에서 다시 이 문제를 제기하자 북한측은 즉시 회담자체를 결렬시켰다.

1998년 3월 28일 일본은 나카야마 마사아키(中山正暉)전 우정상을 단장으로 하는 자민당 방북단이 평양에 도착하여 김용순노동당비서, 김양건부부장 등과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는 북·일수교교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북한공작원의 일본인 납치의혹과 당차원의 교류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북한은 당시(1997년 11월) 일본 방북대표단이 왔을때에 쌀지원과 일·북정상화 교섭을 약속할 예정이었지만 그 계획이 바뀐 것이었다. 그 이유는 일본의무성이 1997년 말부터 「국교정상화 교섭 무조건재개」 방침을 바꾸어 「납치의혹의 진전이 없는 한 교섭은 재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¹⁰⁾ 이는 정상화교섭을 재개하더라도 납치의혹의 진전이 없는 한 그 교섭은 또다시 결렬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정서상으로도 납치의혹을 덮어둔 채 일·북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 외무성의 이 판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 외무성은 그때까지 해외에서 자국민 보호에 소극적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정부로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더라도 일본정부로서는 일본 국민의 안전과 납치의혹을 분명히 해야만 했었다.

만약 김용순이 방일하여 납치의혹을 해명하지 못한다면 일·북 국교정상화 교섭은 재개될 수 없는 것이며, 쌀 100만톤지원의 약속을 받아내는 것도 어렵다.

일본은 1998년 8월 31일 인공위성(광명성 1호)를 발사하였다. 그러

10) 重村智計, “日·北國交正常化の展望,” 「한·일워크샵: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관계 전망」, 1998. 8. 28. 민족통일연구원, p. 4.

나 이 위성은 궤도 진입에 실패하였다.¹¹⁾

일본은 북한 위성이 영공을 통과한 것이 확인되면서 방공시스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방공망 구축 계획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나 개발을 감시할 수 있는 정찰위성 개발과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전역미사일방위(TMD)시스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정찰위성개발은 9월 1일 내각의 긴급결정으로 확정됐다.¹²⁾ 일본의 TMD구축은 미국 장비를 도입하되 '국산화'한다는 방침 아래 더디게 진행돼 왔었다.

올해는 특히 일본 TMD에 대해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중국을 의식해 장쩌민(江澤民)주석의 방일선물로 그나마 공동연구·개발 예산도 배정을 연기해 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우익들이 이 기회를 틈타 군사력 증강과 군비확장을 획책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생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를 카드로 내세우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군부 중시 권력구조 개편이 군사도발 가능성을 크게 할 수 있다고 보고 방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¹³⁾

일본은 김정일이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수반에 오른데 대해 적지않게 우려하고 있다. 권력구조 개편이 '군사국가'로서의 성격을 강화시켜 유연한 대외정책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11) *New York Times*, 1998. 9. 15.

12) 「朝日新聞」, 1998. 9. 2.

13) 「朝日新聞」, 1998. 9. 6.

중국의 기본입장은 일본의 전력강화가 동북아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군비경쟁을 유발한다는 것이어서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97년 「미·일의 신안보조약」의 적용 대상범위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이라는 점 때문에 이것이 일본의 재무장 구실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중국이 항상 갖고 있는 경계심이었다. 따라서 이번 북한의 '미사일사태'를 빌미로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시도한다면 가장 먼저 견제하고 나설 나라도 중국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IV. 結論: 日本의 對韓半島 政策展望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변화 및 미·일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對북한 수교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한반도에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입각한 獨自的인 南北韓 等距離外交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냉전시대의 데탕트시기에도 일본은 자주외교에 입각하여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시도한 바 있었으며, 냉전이후 시대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여전히 다음과 같은 제약을 받을 것이다. 일본의 대한반도정책은 미국의 동북아정책 및 전략 변화에 따라 형성된 동북아질서의 틀속에서 당분간 움직일 것이다. 미국은 냉전이후의 세계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본의 지원을 얻고자 하고 있지만, 일본이 독자적인 군사노선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미국은 일본이 미·일안보조약의 틀 속에서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군사적으로 공헌하기보다 경제적으로 공헌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일본도 냉전이후시대 자신의 안보유지를 위하여 그리고 자국의 국제적 역할증대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여전히 미·일 안보체제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대북한 접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기초한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한국의 반응을 고려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위협이 되는 한 자신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며, 일본이 미국과 안보유대를 맺고 있는 한 한국과 공동의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자본, 기술 등 경제분야에서의 한·일간 긴밀한 협력에 기초한 경제적 이익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일본은 북한과의 접근에 있어서도 한국 및 미국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대북한 국교를 수립한 이후에도 한국에 편향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북한 보상 및 경제지원을 한·일관계 이상으로 확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일본의 과도한 대북한 접근은 한국 및 미국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이다.

클린턴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결정요인

이헌경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I. 서론

미·북간 제네바 기본 합의 타결이후 미국은 이 합의를 근간으로 북한에 대해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 또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클린턴 정부는 '자유주의적 국제주의'(Liberal Internationalism)에 입각하여 한반도 전쟁예방, 핵동결과 대량살상무기 감축, 연착륙 등을 대북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따라 클린턴 정부는 북한의 핵동결, 미사일협상, 생·화학무기협상, 실종미군 유해송환 협상, 연락사무소 개설 등 정치군사적 사안들에 대해서 북한과 접촉에 나서고 있다.

미국은 제네바 기본 합의에 따라 대북 중유제공 및 경수로 공급지원에 나서고 있다. 북한이 원자로건설 중단을 통해 일련의 핵동결작업을 실천하자 미국은 합의에 따라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 외의 정치군사적 사안에 대해서는 식량을 매개로 북한과 협상에 임하고 있다.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으로 체제가 붕괴될 수 있음을 가정하면서 적극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고 있다. 냉전 시기의 북한붕괴정책에서 북한살리기 정책으로 선회한 것이다. 정부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하며, 인도주의적 차원의 민간

지원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클린턴 정부는 4자회담 및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협상과 연계없이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미국으로서는 북한의 미사일실험, 지원곡물의 군사용 전용, 군사력 증강, 정전협정 위반행위, 테러행위 등의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북한의 붕괴·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대북 식량지원을 중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미정부의 정책은 많은 비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다.

실제로 식량위주의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은 여러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내적 요인으로는 의회의 협력, 전·현직 정책결정자의 객관적·주관적 인식, 민간자선단체들의 지원호소 및 참여,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견해, 언론보도, 국민여론 등이 있다. 그리고 외적 요인으로는 국제기구의 대북정책, 중국·러시아·일본의 대북정책, 외부 세계의 반응, 한·미 공조체제, 남북관계, 한국의 국내정치 등이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결정과 그 추진과정에 있어 긍정적·부정적, 직접적·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이 지원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외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향후 이들 요인들이 영향하에서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전망하고자 한다.

II. 내적 요인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결정에 있어 ① 의회의 협력, ② 외교안보관련 기구 및 정책결정자의 객관적·주관적 인식, ③ 민간자선단체의 지원호소, ④ 한반도문제 전문가들의 견해, ⑤ 언론보도, ⑥ 미국민의 관심 등이 내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①, ②, ③은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그리고 ④, ⑤, ⑥은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 볼 수 있다.

첫째, 미의회의 협력이다. 이는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클린턴 행정부는 상·하 양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의 협조없이 외교상 중요성을 높이거나 정책을 자신있게 추진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공화당이 미국의 외교정책 수행에 필요한 예산편성을 지지하지 않을 때 클린턴 정부의 외교정책 추진은 곤란에 처하게 된다. 클린턴 정부는 집권 1기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행정부와 의회간 마찰을 수반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에서 클린턴 정부는 집권 2기에 비교적 의회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외교현안에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외교안보팀에 인선했다.¹⁾

실제로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은 사안에 따라 정책입안 부서간의 대립이 표면화되기도 하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의회가 제동을 걸기도 한다. 미행정부와 의회는 한반도 전쟁예방을 위해 대북 억지력 강화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감축에 주력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나, 북한 핵동결 및 연착륙·유화 정책에 대해선 공화당이 반대하

1) 외교안보팀 구성에 비전과 이데올로기는 크게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공화당측의 호감을 사고 있는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와 코언(William Cohen)을 중용한 데서 나타나 듯 클린턴 정부는 집권 1기 동안 빚어진 행정부와 의회간의 마찰을 완화하는데 비중을 두었다.

고 있다. 공화당측은 북한의 핵동결이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며, 때문에 제네바 합의에 대해 오래 전부터 반대가 있었다. 또한 그들은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외교적 무기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위주의 대북 정책은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미국의 궁극적 정책목표인 한반도 전쟁예방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본다. 동시에 그들은 1996년 9월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²⁾과 계속되는 북한의 도발에 미국이 최저한의 대응밖에 취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한·미 공조 체제를 이간시키고 대미 신뢰를 저하시킨다고 판단한다.

또한 공화당측은 북한이 상호주의를 무시한 행동을 지적하고 있다. 3년전 미정부는 의회에 대해, “미·북간 합의는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하고, 每단계에서의 미국의 조치에 대해 상응하는 북한의 조치가 있을 것”이며, “북한이 상호주의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합의는 파기될 것”³⁾이라고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은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추진되어 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화당측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미국의 추가 대북식량지원 결정이후 북한이 지원식량을 군사용으로 전용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미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997년 5

2)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 때 미국은 우발적 사건으로 본 반면, 한국은 북한의 도발로 간주해 심한 마찰을 겪은 바 있다. 이 때 미국의 일부 미외교관들이 “한반도에서 골칫거리인 북한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라는 매도적 견해를 표출하였었다. 결국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하면서 북한을 압박하였고,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한 시인,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함으로써 이 사건은 일단 무마되었다. 미정부는 이 사건으로 한·미간에 ‘불화’와 ‘우호의 좌초’가 생겼음을 지적하고 있다. *New York Times*, November 17, 1996 참조.

3) *Washington Post*, March 27, 1997. 만약 미하원이 상호주의 원칙과 함께 대북지원 조건을 전제로 한 발의안을 통과시키고 이것이 상원 본회의 통과후 대통령의 재가 나면 이 법안은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이후부터 발효, 미국의 대북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대통령이 이 법안을 찬성하지 않을 경우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럴 경우 의회와 행정부의 갈등이 따를 수밖에 없다.

월 1일 클린턴 정부의 대북 지원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이 상호주의를 완전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 위원회의 공화·민주당 30여명의 원 전원이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① 지원쌀 군량미 전용 금지, ② 한국정부의 반대가 없어야 함, ③ 북한의 군량미 식량난에 사용, ④ 지정된 수혜자에만 제공, ⑤ 북한에 농업개혁 촉구 등 5개 조건을 전제로 하는 데 찬성하였다.⁴⁾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과 북한의 불성실한 태도 등이 미의회로 하여금 불신하게 한 것이다.

둘째, 외교안보관련 기구 및 정책담당자들의 객관적·주관적 인식이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국무부 東亞太局이 전담하는 데 담당 실무자들이 정책결정에 직접 관여한다.⁵⁾ 동아태국 밑에 韓國課가⁶⁾ 있으며, 同課가 뉴욕실무 접촉을 비롯 상시 대화채널을 가진다.

그리고 國防情報局(DIA), 中央情報局(CIA), 國家安保會議(NSC) 등 정보기관과 주한미대사, 주한 미8군 사령부 등의 정보 및 주관적·객관적 인식 등이 미정부의 대북 정책결정 및 접근에 있어 최적의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뿐만 아니라 전·현직 관료·정치인들의 주관적 인식 역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크리스토프(Warren Christopher) 前국무부장관, 레이니(James Laney) 前주한미대사, 로드(Winston Lord)·갈루치(Robert Gallucci) 前미국무차관보와 같은 외교안보관련 담당자, 넌(Sam Nunn) 前상원, 스티븐슨(Ted Stevens) 상원, 홀(Tony Hall)

4) The Committee of International Relations, House of Representatives, *A Reform Bill of Foreign Policy*, chap. 7, sec. 574 (May 1, 1997).

5) 최종 실무책임자는 동아태국 로스(Stanley Roth) 차관보이며, 최고 결정자는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다. 그렇지만 엄밀히 말해 국무장관보다 국무부 동아태국 차관보가 대북 정책에 있어 실질적인 결정자라고 볼 수 있다.

6) 동아태국 한국과는 1995년 이후 18명의 직원을 갖춘 최대 課로 부상했다. 일본과와 중국과를 제치고 한국과가 부상한 것은 북한문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고 KEDO 전담요원 7명이 가세했기 때문이다.

하원, 퀴노네스(Kenneth Quinones) 前국무부 정보조사국 북한정세 담당관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 중 년, 스티븐슨, 홀 등은 개인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 적이 있다. 실제로 이들은 특사에 해당되며 이들의 방북 보고서가 정책결정 수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북한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분석을 내리면서 클린턴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쳐 왔다.

셋째, 미국내 민간자선단체들의 대북 식량지원호소다. 「월드 비전」(World Vision International), 「벨 재단」(J. Bell Foundation), 「카리타스」(Caritas) 등과 같은 비정부 민간단체(NGO)들은 정치외교적 차원이 아닌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을 보고자 한다. 이들 민간단체들은 “미국이 1980년대 앙골라 내전당시 반군세력 지원정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으며, 수단이 1991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을 지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수단 식량구조 사업을 벌인 바 있음”⁷⁾을 주지시키면서 “과거 미국은 외국에서의 餓死 발생시 부족분의 1/3~1/4을 지원해 왔으나 북한에 대하여는 부족분의 1/10만 지원하고 있다”⁸⁾는 닛시오스(Andrew Natsios) 월드 비전 부회장의 지적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민간자선단체들은 미국이 정치적 이유와 연계없이 북한주민의 생존문제 해결이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대북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⁹⁾

넷째, 한반도 전문가들, 닉쉬(Larry Niksch), 매닝(Robert Manning),

7) *Washington Post*, February 6, 1997.

8) *Washington Post*, July 15, 1997.

9) 테일러(Bill Taylor) 및 앰브로스(Jay Ambrose)는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는 “북한정권의 연명을 돕는 인도적 원조는 그만두어야 하며,”(『東京新聞』, 1997.5.14) 후자는 구호단체들이 조건없는 대북 지원을 바라고 있으나 호전적인 스탈린주의 정권이 100만 대군을 배치, 한-미 양국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무조건적 대북 지원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Washington Times*, June 3, 1997).

커밍스(Bruce Cumings), 테일러(Bill Taylor),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노랜드(Marcus Noland) 등의 대북정세 판단 및 예측이 미정부의 대북 정책결정 방향을 설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테일러는 대북지원보다 대북 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¹⁰⁾ 에버스타트와 니쉬는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soft-landing policy)에서 탈피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데, 이 정책 대신 전자는 적극적인 한반도 통일정책 추진을¹¹⁾ 그리고 후자는 조건적 대북지원 전개 및 정책변화유도¹²⁾를 제의하고 있다. 한편 커밍스·매닝·노랜드 등은 '대홍정'(grand bargain)¹³⁾을 역설하고 있다. 대홍정은 북한에 대규모 경제원조와 안보보장을 해주고, 대신 군사·경제행위에 대한

10) 대북지원 대신 패트리엇 미사일 공여 및 북한의 공습 및 포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제고를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東京新聞』, 1997.5.14.

11) Nicholas Eberstadt, "Hastening Korean Reunification," *Foreign Affairs*, 76, no. 2 (March-April 1997), pp. 77~92.

12) 북한의 농업분야를 시작으로 한 근본적인 경제개혁을 대북 식량지원의 조건으로 달거나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Larry Nicksch, "North Korea: Where We Go Next," Typescript (1997); *Washington Post*, May 20, 1997. 미평화연구소의 Korea Working Group(1997.7.28), Charles Kartman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다. 전자는 한·미 양국이 식량지원, 연착륙 정책 등 대북 개입정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북한경제체제의 근본적 개혁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후자는 북한의 식량문제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구조적·만성적이므로 외국으로부터의 지원도 있어야겠지만 북한이 정책전환을 통해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니쉬는 연계성을 놓고 미국이 대북 협상을 추진하되 북한을 외교적 협상 테두리내에 잔존시켜야 하며,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할 경우 미국은 UN을 통한 1998년 대북 식량지원을 年 2,000만달러 수준으로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13) Bruce Cumings, "Toward a Comprehensive Settlement of the Korean Problem," paper presented at the Columbia University Symposium on the Four-Party Talks, October 20, 1997; Marcus Noland, "The Economics of Korean Unification," Columbia University Seminar on Contemporary Korean Affairs, November 20, 1997; Robert A. Manning, "Diplomatic Hiatus in the Korean Endgame: Time to Step Back and Reassess Next Steps,"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 Special Report, October 14, 1997.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게 하자는 것이다. 매닝은 몇 개의 단계에 걸쳐 이루어지는 포괄적 해결방안¹⁴⁾을 제의하고 있다.

다섯째, 신문·방송 등 언론의 역할이다. *New York Times*, *Los Angeles Times*, *Washington Post*, *Washington Times* 등 미국의 주요 신문들은 전문가의 견해나 사실을 통해 미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지지 또는 비판을 가하면서 여론을 이끈다. 그렇다고 이것이 해당 언론사의 공식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의 상반된 견해·주장을 비교·분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미국의 극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대북 정책을 미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다.

앞으로 이들 신문과 함께 TV보도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정책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양지도부는 1997년 4월 CNN 방송 관계자들의 북한취재를 허용해 굶주린 북한주민의 모습이 방영된 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외국 TV社의 북한실정 보도를 허용하여 세계의 동정을 얻는 방법”¹⁵⁾을 취하지 않고 있어, 미국·남한·일본 및 서방세계국가들이 적극적인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최근 북한당국은 외부 세계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 TV보도를 허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여섯째, 미국민들의 북한문제에 대한 관심이다. 그동안 미국민들은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에 무관심하였다. 미국이 에티오피아와 소말리아에 대해 대규모 식량지원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민들이 TV화면을

14) 북한이 미사일·화학무기 제거 및 휴전선 배치병력 감축을 이행하고, 그 대가로 한·미·일이 대규모 식량원조, 농업지원, 북한과의 관계정상화, 원조와 투자 촉진, 세계은행(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DB)에의 북한의 가입 등을 제공해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Los Angeles Times*, May 4, 1997.

15) *The Sun*, May 14, 1997.

통해 현지 사정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식량실정에 대한 TV보도가 허용되면 미국민들은 클린턴 정부의 적극적인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

Ⅲ. 외적 요인

미국의 대북지원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요인으로는 ① 국제기구의 대북정책, ② 중국·러시아·일본의 대북정책, ③ 외부세계의 반응, ④ 한·미 공조체제, ⑤ 남북관계, ⑥ 한국정치적 불안정 등이다. 여기서 ①은 직접적인 영향을 그리고 나머지는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첫째,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요청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지원을 촉구한다. 국제기구들은 북한주민이 굶주림에 처하자 -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영양실조에 처하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외부 세계의 대북 식량지원을 요청해 왔다. 「세계식량기구」(WFP), 「국제농업기구」(FAO),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보건기구」(WHO) 등 유엔 산하 기구들의 1차(1995.9~9), 2차(1996.7~1997.3), 3차(1997.4~1998.3) 지원호소가 그것이다. 미국은 이러한 요청에 따라 대북 식량 지원에 나서 왔다.

둘째, 중국·러시아·일본의 대북 지원정책이다. 이는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중국이 북한생존 차원에서 북한지원에 나서고 일본이 피북 일본인처 고향방문, 일본인 납치 문제 등으로 대북 식량지원에 유보적 입장을 보였던 당시 미국은 대북 지원의 규모와 속도를 조절해 왔다.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으며 러시아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본은 독자적으로 또는 미국·남한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대북 정책을 수립하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려 한다. 따라서 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자국의 국익에 맞는 대북 정책을 모색할 것이며 이러한 정책들이 미국의 대북 정책과 충돌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셋째, 외부 세계의 반응이다.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국이 아니더라도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국가들도 한반도문제를 동북아시아 정책의 큰 틀 안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들 유럽국가들은 미국의 대북 정책을 대부분 지지하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 등의 정책이 충돌할 때 미국에 힘을 실어주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들이 미국과의 정책공조를 위해서는 대북 지원에 관한 국민과 여론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북한에 식량지원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질문에 세계 주요 언론들은 찬성보다 반대 입장을 더 많이 보도(1997.4.15~5.17)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질문에 찬성 23%(36건), 반대 33%(53건), 단순 사실보도 44%(70건)로 답변되었다.¹⁶⁾ 국가별로 보면 미국이 찬성 15건, 반대 11건; 프랑스가 찬성 3건; 영국은 찬성 2건, 반대 6건; 독일은 찬성 6건 반대 10건; 일본이 찬성 1건, 반대 4건이다. 프랑스 언론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반면, 일본언론이 가장 부정적인 시각에서 그리고 영국언론이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주요 서방국가들의 언론보도가 미정부의 대북 정책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미국의 무조건적 대북 식량지원이 최적의 결정이 아님을 알리는 것이다.

넷째, 한·미 정책공조유지다. 클린턴 정부는 한·미 공조체제란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한·미는 북한의 침략에는 즉각 대응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군사적 사안이 아닌 외교적·경제적 사안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견해 불일치를 보이고 있다.¹⁷⁾

16) 공보처가 1백59건에 달하는 세계 언론들을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것이다. 「조선일보」, 1997.5.26.

17) 클린턴 정부는 김영삼 정부와 마찰을 수반한 적이 있다. 4차회담과 관련, 한·미가 협력체제를 구축해 왔으나 대북식량지원 문제에 있어선 정책의 차이가 있었다. 북한의 대남 도발과 관련, 1996년 9월 잠수함침투 사건 때는 한·미간 마찰이 생겼으며, 1997년 7월 북한의 비무장지대 침투 사건 때는 한·미 공조체제가 강화되었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의 대북 ‘개

한국정부는 제네바 기본 합의에 근간을 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동결이 아닌 핵투명성을, 무조건적 대북 지원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된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공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한국은 미국이 북한의 실체와 혁명전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보고, 미국은 한국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해 정책공조를 이루기가 쉽지 않다고 여긴다. 한·미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다르고 북한을 대하는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다섯째, 남북관계의 진전여부다. 클린턴 정부는 미·북간 관계개선에 있어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조건이라 생각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남북관계는 미국의 대북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친다.¹⁸⁾ 예를 들어 북한이 미사일실험, 정전협정 위반행위, 무장간첩 침투 및 잠수함 침투 등 무력적 행동을 감행했을 때 미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은 제동이 걸렸었다. 북한의 테러행위는 남북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이것은 결국 미국의 대북 정책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현실적으로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될 때 양측은 각각 상대를 향해 초강경 정책을 취할 것이다. 이 때 미국은 남한을 의식해야 하기 때문에 진행 중인 대북 정책을 자신있게 추진하기 어렵다. 즉, 남북관계의 진전은 미국의 관계개선에 가속도를 부칠 수 있지만, 역의 경우 미국의 대북 접근이 제약을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이 남한과 대화하도록 하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북관계는 그렇게 빨리 진전할 수 없고, 한반도의 장래도

입정책'과 한국의 '햇볕정책'이 대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미공조 체제는 김영삼 정부때에 비해 강화되고 있다.

18) 클린턴 정부는 집권 1기 동안 북한의 핵동결에 너무 집착한 반면 남북관계를 중시않고 남북등거리 외교를 실시하는 등 한반도의 근원적 문제해결에 기여하지 못했다.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¹⁹⁾란 로드(Winston Lord) 前미국무차관보의 발언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남북대화 및 관계진전이 미·북관계 진전은 물론 한반도문제의 근원적 해결에 도움이 된다.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회피하는 이유는 남한이 군사적 수단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남북대화가 진전되면 미·북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체제 및 한·미 공조체제 유지 등 한국정부가 민감하게 여기는 부문에 대해선 남한과 협조해 나간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북대화를 우선시할 뿐 제네바 기본 합의 이행사항인 남북대화는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북한은 남북대화 전개를 염두에 두지 않고, 미·북간 협상에 진전을 보지 못하거나 위기에 직면할 때 남한을 대상으로 침략위협을 가하려 한다.

여섯째, 한국내 불안정 요인이다. 그간 미국의 관리들은 한국측이 국내정치적 이유때문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소극적이며 북한의 도발에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고 불평해 왔다.²⁰⁾ 심지어 올브라이트(Madeleine Albright) 장관조차 한국이 “국내정치적 관심 때문에 가장 현실적인 북한에의 접근방법에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된다”²¹⁾는 입장을 보인 적이 있었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나 한국정부의 입지가 축소될 때 한국은 보수주의적 정책노선을 지향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 때 미국의 대북 연착륙 정책과 충돌할 수 있다. 미국은 “대북 정책에서 한국정부가 국민인기에 영합하는 제안을 하거나 유연하지 않은 입장을 취함으로써

19) Winston Lord, *Unofficial Transcript: Lord 1/14 Farewell Briefing at FPC*, (January 14, 1997).

20) *Washington Post*, February 23, 1997.

21) *New York Times*, February 21, 1997.

써 한·미간 정책조정을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이 있으며, “계속되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미·북 및 한·미관계에 문제를 야기할 수”²²⁾ 있다고 보는 경향이 때때로 있다.

22) 「한국일보」, 1997.2.28.

IV. 결론

향후 미정부는 여러 내적·외적 요인들의 작용 여부를 고려하면서 대북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 및 추가 경제제재완화 조치 등을 통해 식량난·경제난에 처해 있는 북한을 도우면서,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개발, 핵동결 파기 가능성, 침략위협 등 무력적 수단을 통해 위기를 풀어나가려는 북한의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제Ⅱ, Ⅲ장에서 언급된 내적·외적 요인들 중에는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것이 있는 가하면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도 있다. 국제기구 및 민간자선단체들의 대북 지원호소 및 참여가 항상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뿐 그 외 요인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다.

그동안 미국은 북한살리기가 북한붕괴보다 미국의 차원에서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대북 지원에 나서왔고, 부정적 요인이 작용하더라도 지원정책에 결정적으로 타격을 가하지 않는 한 대북 지원을 지속해 왔다. 클린턴 정부는 식량난·경제난·사회일탈 현상 등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북한을 막다른 선택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키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수 있고 판단하고 있다. 전쟁예방 차원의 대북 지원비용이 전쟁시 투입되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산술적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미국이 대북 경수로공급사업과 중유 제공에 나서고 있는 것도 예방방위적 차원에서 북한의 침략위협과 공갈외교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이 대북 지원정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동결의 성실한 이행과 더불어 폭력행위 및 침략위협 등을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미국의 대북 정책은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의회로부터

견제를 받을 것이고, 한국·일본·서방세계, 한반도문제 전문가, 언론, 미국민의 비판이 뒤따를 것이다. 심지어 미행정부내 외교안보관련 기구 및 정책결정자들조차 대북 지원정책에 대해 재고할 것이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폭력적 행위 등에 즉각적이고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클린턴 정부는 북한이 이러한 행위를 도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양지도부가 군사적 수단을 포기하리라 보기 어렵다. 그들은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이 여러 요인들에 지장을 받을 때, 북한에 불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 그리고 최악의 사태에 빠질 경우를 대비해 그들의 군사적 수단과 충동성, 불예측성, 저돌성 등을 교묘히 이용하려 할 것이다. 북한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미국으로부터 식량지원, 추가 경제제재완화, 정치적 양보 등을 얻어내려 할 것이다.

북한이 군사적 수단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 식량지원정책이 합리적인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뒤따른다. 그 동안 미국은 대북 지원에 있어 “아사 자체가 정치적 불안, 정치적 실패, 또는 경제적 실패에서 비롯”²³⁾된다는 사고하에 정치군사적 문제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결부시키지 않는 정책을 전개하였다. 1980년대 중반 東-西 냉전기 극심한 식량난에 직면한 에티오피아에 미국이 봉쇄정책을 취한 결과 이 나라에서 집단 餓死로 홍역을 치른 경험을 기억하고 있는 미국으로서는 인도주의적 이유를 들어 대북 식량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북한의 군사력 증강과 일부 지원식량의 군사용 전용 사실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대북 식량지원을 계속한 것도 인도주의적 이유에서 이다.

23) “세계 모든 국가의 경우, 식량원조를 정치적인 문제에 연계시키기 시작하면 아사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원조는 불가능하게 될 것”이란 번스(Nicholas Burns) 미국무부 대변인(1997.4.28)의 발언에서 나타나듯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에 있어 인도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북 식량지원이 정치적 고려없이 인도주의적 이유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가? 대북 연착륙 정책과 관련, 대북 식량지원이 한반도 전쟁예방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기 위한 수단인가? 이러한 모든 질문에 대해 클린턴 정부는 '예' 또는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대북 지원은 인도주의적 측면과 함께 현실 정치의 맥락에서 수행되고 있으며, 한반도에서 정치군사적 목적달성을 위해 인도주의적 명분을 내걸고 전개되어 왔다.

미정부는 대북 식량지원의 폭과 범위를 넓힌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질문도 뒤따른다. 북한이 식량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때까지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해결할 때까지인가? 실제로 북한의 식량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근본적 해결이 어렵고 북한의 경제난 역시 구조적인 문제로 해결되기 어렵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식량지원과 함께 농업개혁과 경제개혁·개방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북한은 군사력을 감축해야 한다. 하지만 김정일을 비롯한 평양지도부는 군비감축이 미국과 남한을 대상으로 한 군사력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없게하고 경제개혁·개방을 체제 위협 요인으로 여기고 있어 이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렇다면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은 막연할 수도 있다.

북한은 '餓死 대신 戰死'라는 선택의 가능성을 예기하면서 그들의 군사력과 침략위협을 활용해 실익을 챙기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전략과 더불어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에 제약을 가하는 여러 내적·외적 요인들의 상존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대북 지원정책은 여러 측면에서 딜레마에 놓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미정부는 어떤 방해 요인이 작용하면 그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취할 것이며, 부정적 요인이 결정적·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에는 대북

지원정책이 유동적일 수 있다고 본다. 정리하자면, 미국의 대북 지원 정책은 내적·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며, 북한의 폭력적 행위가 용납될 수 없을 정도에 달할 경우 정책수정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표요지>

일본의 대한반도정책

楊伯江

(東北亞研究室 副主任, 副教授研究員)

- 중국은 주한·주일 미군을 용납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지는 않으며 일정정도 미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중국은 미·일 안보관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의 강화에 반대하는 것임.
 - 역으로 대국주의에 입각한 중·미 공동지배에 대한 우려 역시 비현실적인 것임.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의 목표는 첫째, 한반도의 현상유지, 둘째, 한반도 위기관리에의 개입, 셋째,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추구 등임.
 - 일본의 한반도 현상유지 정책은 '92년 이전의 일본의 대중정책과 유사함.
 - '92년 이후에는 중국 국내의 대혼란에 따른 중국위협론이 득세하게 됨.

- 일본은 대한반도 정책의 추진방식에 있어서 다변적, 쌍무적, 삼자적 방식을 교차활용하고 있음.
 - 일본은 '94년 제네바핵합의 이후 최근의 미사일사태까지 다변적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데 다변적 방식으로는 KEDO, 한·미·일 동맹을 통한 한반도 안전관리 등을 들 수 있음.

- 쌍무적 방식은 한·일간의 외교현안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을 의미함.
 - 삼자적 방식은 남북한과 일본의 삼각관계에 대한 대처방식으로 서 남북한 등거리외교를 통한 영향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한반도에서의 독특한 역할을 통한 영향력 추구는 '96년 4자회담이 제기된 이후 뚜렷이 나타나고 있음.
- 일본은 러시아와 더불어 「2+4」 방식을 제기한 바 있는 바, 클린턴이 제기한 4자회담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됨.
 - 금년에는 「2+3」 방식도 제기한 바 있으나 현실성은 별로 없는 편임.
 - 일본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일관계의 개선을 원하고 있음.
 - 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경제우위에 기초하여 한·일 운명공동체에 대한 구상이 제기되고 있음.
 -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는 바, 이는 한·일 쌍무관계 뿐만 아니라 지역문제,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임.
- 김대중대통령의 방일(10. 7)을 계기로 한·일관계는 21세기를 지향하는 선린동반자관계로 재정립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은 90년대 이후에는 통일이후의 문제까지 고려하고 있는 바, 북한의 핵개발, 위성발사, 배상금 지급 등에 대한 정책에 있어서 통일한국까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일본은 배상금 지급문제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제기되면 곤란하다는 입장임.

<발표요지>

동북아와 중·미관계 전망

丁奎松

(所長辦公室 主任, 研究員)

- 동북아는 아·태지역의 평화 및 번영과 직결된 지역으로서 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첫째, 역내 국가들의 안정 추구, 둘째 다양한 안보모델의 창출, 셋째 경제안보 중시 등이 요구되고 있음.
- 역내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부채형의 전략구도와 중·러간의 '전략적 동반자관계' 등 다양한 전략구도가 존재하는 바, 한반도는 이러한 전략적 구도가 결합된 이익의 교차점임.
 - 동 지역 국가들은 경제발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군사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음.
 - 한반도의 평화유지라는 점에서 중·미간의 이해가 일치하고 있음.
- 역내 안보모델로서는 쌍무적 동맹관계와 다변적 안보협력이라는 두가지 추세가 존재함.
 - 미·일동맹, 한·미동맹 등은 냉전의 유물로서 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으나 탈냉전 이후 이것이 강화되는 것은 지역안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임.
 - 다변적 안보모델로서는 ARF 등이 있는데, 이는 新안보관을 반영하는 모델로서 대화·협력·교류 등을 통하여 평화·안정을 추구하는 것임.

-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경제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는 바, 이번의 위기는 경제안보 측면에서의 협력의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 위기발생 국가의 국내모순 격화에 따른 정부의 통제력 부족은 역내의 평화·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방적인 조치와 제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탈냉전기에 들어서 중·미관계는 이중적 경향을 보여주었음. 미국은 무역, 군비, 인권, 대만문제, 티벳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에 부단한 압력을 가하였는 바, 여전히 냉전적 사고가 잔존함을 보여주었음. 다른 한편 중국의 부단한 성장은 미국의 대중시각을 교정하여 건설적 동반자관계를 추구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 '95년 이등회의 방미 이후 대만해협에서의 중국의 유도탄 훈련은 미국의 정책을 전환시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함.

- 미국은 중국에 대하여 3가지 不可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첫째 미국은 중국의 쫓기를 저지할 수 없다는 것, 둘째 중국을 배제하고 아·태지역 문제를 다룰 수 없다는 것, 셋째 중국을 전략적으로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임.
 - '97년 강택민의 방미, 금년 클린턴의 방중으로 중·미관계는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였음.

- 중·미관계는 협력(Cooperation), 공존(Coexistence), 협조(Coordination), 타협(Compromise) 등 4가지 C로 규정할 수 있음.
 - 협력이란 소위 건설적인 동반자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특히 지도자간 정례교류체제 및 안보협력틀의 정립이 중요함.

- 공존이란 상호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임. 이와 관련, 미국은 중국이 2015년 이전에 미국의 경쟁자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중국도 미국을 외교정책의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인정하고 있음.
 - 협조란 지역안보문제 등에 있어서 의견을 교환하고 조정하는 것임.
 - 타협이 요구되는 현안으로서는 무역, 인권, 대만, 군비통제 등의 문제가 있음.
- 중·미관계의 발전은 한반도 문제의 해결, 지역국가간 대화 증진, 지역경제의 발전 등 3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중·미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3가지 장애가 있는 바 첫째, 중국을 가상적으로 설정하는 미국내 일부 냉전적 사고, 둘째 대만 문제를 둘러싼 잠재적 갈등, 셋째 클린턴의 지위 약화에 따른 미국의 대중정책의 불확실성 등임.

<토론>

최춘흠 박사: 양측의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발표가 길어진 관계로 토론에 할애된 시간을 예정 보다 10분 정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먼저 개인적 견해를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동북아 정세를 낙관적으로 보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만 향후 일 년 정도의 단기적 시각으로 보면 그다지 낙관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중·미관계가 중요하다라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클린턴의 성추문에 따른 레임덕 현상으로 인해 중·미관계 발전에 제동이 걸리고 북한이 중·미간 갈등구조를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북한 미사일사태로 인해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어 북·일수교의 전망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일본은 TMD관련 예산을 150억불 정도 비축하고 있는 등 군비를 확장하고 있어서 마음먹기 따라서는 군사대국화가 시간문제인 상태입니다.

한국의 경우도 햇볕정책은 지속하겠지만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범위를 180Km에서 300Km로 확대하는 문제를 미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문제를 일으키면 항상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재정을 부담해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의 한 학자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5억 8천만불이 필요하다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망과 관련하여 한·미·일 안보협력과 중·북관계간의 연관성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사건 이전에도 한·일 안보협력은 긴밀해져 온 반면 한·중 안보협력은 상대적으로 진척이 더디었

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정부와 학자들의 고민은 북한이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인데, 북한의 미사일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한·미·일이 공동으로 TMD 개발에 나설 경우 이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여 중·북관계를 강화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丁奎松 연구원: TMD의 原案은 미·일·한·대만의 공동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TMD의 방어목표를 북한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제는 북한 유도탄의 위력에 비추어 TMD의 방어능력이 지나치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관심은 대만인데 미국의 TMD구상에서는 대만을 주요 방어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그 다음입니다. 양안간 무력충돌 발생시 중국이 사용할 수 있는 무기중 일차적인 것이 유도탄이기 때문에 TMD는 북한 보다도 중국의 유도탄을 방어하는 측면이 훨씬 큼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관련제국이 신중한 태도를 취하여 지역평화와 안정에 불리한 일을 초래하지 말고 대화로 풀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김정일의 취임에 대한 선물이자 북한의 능력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한국을 겨냥하는 것이 아닌 이상 TMD구상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춘 박사: 일본은 원래 강택민의 방일선물로 TMD 관련 예산을 연기해 놓은 상태였는데 북한 미사일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TMD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대체적으로 미국의 전략적 틀 내에서 움직이는데 이를 중·일간의 갈등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중국은 TMD 자체 보다는 일본 우익

세력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보고 싶은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楊伯江 부교수연구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나 한국에서 TMD를 도입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게는 TMD 도입과 독자적 정보위성 개발의 두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는데 TMD에 가입하여 스스로의 손발을 묶는 일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TMD는 6차례의 실험에서 실패하는 등 많은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더구나 현재 일본은 경제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일본은 매년 400억불을 군사비로 지출하고 있는데 이중 27%를 군사장비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하에서 150억불을 군사장비에 지출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주변국의 강력한 저항의 문제도 있는 바, 여러가지 측면에서 TMD 도입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丁奎松 연구원: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제로 상정되고 있는 한·미·일 공동 안보협력의 실현가능성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실현된다면 중·북합작 보다는 중·러간 안보협력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중국의 안보에 대한 도전이 제기된다면 부득불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최춘흠 박사: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응하여 중·러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상황이 온다면 오갈데 없는 북한이 중·러와 협력하여 남방삼각 대 북방삼각이라는 구도가 다시 형성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楊伯江 부교수연구원: 북한 미사일의 명중률이 현저하게 낮으며 한국이 아니라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면 한국이 TMD구상에 참여하는 것은 스스로의 국익에도 손해를 끼치는 일입니다.

丁奎松 연구원: 최근의 사태와 관련, 중국은 첫째 현재 미사일이 발사된 상황이 아니고, 둘째 이를 이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셋째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중국과 협의하라는 문제해결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황병덕 박사: 최근의 사태에 한국이 관심을 갖는 것은 안보관심 때문이라기 보다는 남북관계와의 관련 때문입니다. 한국정부는 최근의 사태로 인해 대북 포용정책, 즉 햇볕정책이 유실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와는 맥락이 다른 문제이지만 최근 중국이 내수를 중시하는 발전모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한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현재 세계경제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각국이 내수지향의 경제발전을 모색하고 그 결과 민족주의적 경향으로 나아가간다면 신냉전이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이 지역경제에 관심을 가지고 아태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동시에 아태지역의 안보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기를 바랍니다.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陸忠偉) 면담요지('98. 9. 23)>

- 일본의 TMD구상 참여는 일본군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TMD구상은 역사상 만리장성, 항공모함, 지구대전 등과 비유할 수 있는데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요구되는 반면 효과는 불확실하다는 결함이 있음.
 - 이는 동시에 역내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임.
 - 국가관계는 어디까지나 '외교'를 중심으로 해야 함.
- 미국이 일본의 TMD 참여에 집착하는 것은 이를 통하여 일본의 전자기술 획득이 용이하기 때문임. 한편, 일본은 이를 통하여 헌법의 제한을 타파하고 정보위성 개발, 지탄방어능력 구축, 무기수출 등 3가지를 실현할 수 있음.

Q) 북한의 진정한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A) 경제, 군사, 정치, 외교 등 4가지 목표를 상정할 수 있을 것인데 군사적 목적이 주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없음. 장거리미사일인 만큼 남한위협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이미 사정거리 6,000Km의 대포동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또한, NEC사와

의 부정거래 등으로 어려운 입장에 놓인 일본군부에 반전의 기회를 제공한 만큼 주일미군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따라서 다른 나라에 팔기 위한 상업적 목적이나 김정일 취임을 축하하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음.

Q) 군사적 목적은 없다고 하지만 북한의 잠재적 핵개발 능력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A) 북한의 로켓발사는 40억달러의 KEDO 지원이 필요함을 보여주 기 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음. 만약 40억달러가 지원되면 북한핵에 대한 미국의 감시가 엄격해 질 것임.

Q) 북한이 MTCR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규제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중국 역시 MTCR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데?

A) 중국은 MTCR 가입을 고려중이나 대만에 대한 패트리엇 미사일 제공이 변수가 될 것임.

Q) 북한은 핵 외에도 생화학무기 등의 대량살상무기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따라서, 능력보다 위협의 의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억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치로는 무엇이 있는가?

A) 결국은 핵문제에서처럼 지역국가들이 재정부담을 떠안는 방식이 되지 않을가 예상함. 만약 북한을 세계경제에 편입시키면 이런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아도 될 것임.

간담회 일정

- 주 제: 최근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 방향
- 일 시: 1998. 9. 25
- 장 소: 요녕성 사회과학원
- 참석자: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황병덕(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춘(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헌경(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배(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朴成昊(遼寧社會科學院 東北亞研究所長)
呂 超(遼寧社會科學院 外事處長)
金 哲(遼寧社會科學院 東北亞研究所 研究員)
禹穎子(遼寧社會科學院 東北亞研究所 研究員)

<간담회 요지>

최춘흠 박사: 북한 미사일사태를 둘러싼 동북아정세와 한·중관계 현안에 대한 요녕성 사회과학원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呂 超 의사처장: 한국과 요녕성의 관계는 꾸준히 발전하여 영사관 설치 등에 관하여 거의 합의에 이르렀으나, 김대중대통령의 「재외동포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로 난관에 봉착하게 된 것 같습니다.

朴成昊 소장: 금번의 사태와 관련, 한국과 미국은 발사체가 미사일이라는 입장을,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북한이 원거리 유도탄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동북아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인도북한대사의 언급도 있었지만 북한 미사일이 겨냥하는 것은 한국이나 중국, 그리고 미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를 계기로 군비를 확장한다면 중국을 자극하여 냉전구도를 재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냉정한 자세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중국 일반학자들의 입장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 비난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차대전 이후의 경우도 그렇지만, 아시아 금융위기에서도 옹분의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일본이 미사일 발사에 대하여 왈가왈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 한국관리가 일본과 협력하는 모습은 어딘지 이상하다는 느낌마저 있습니다.

황병덕 박사: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이라는 사실은 미국도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의 사태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일본, 중국의 대응에 따른 동북아질서의 재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궁금한 점은 중국과 미국이 개입할 것이 분명한데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나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중국측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김영춘 박사: 중국의 일년 국방예산이 100억불인데 비하여 일본은 400억불이나 되기 때문에 일본이 군비확장에 박차를 가하게 되면 군사대국화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신상진 박사: 이번 사태의 국제적 확대로 가장 이득을 볼 국가는 북한과 일본이며, 가장 손해를 볼 국가는 중국과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군비확장에 대한 국내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며, 북한의 경우는 협상력 제고라는 반사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의 군비확장에 대응하다보면 경제에 부담을 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입장을 고려하다 보면 대미·일 관계가 난처해지는 측면도 존재합니다. 한국의 경우도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다 보면 햇볕정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한편, 미국은 북한에 대해 반대급부로 제공할 것이 없는 외교력 약화의 상황에서 문제의 확대를 바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 중국 당중앙군사위 부주석이 방미, 미국방장관과 미사일사건에 가능한 신중하게 대응하고 미국에 적극 협력할 것을 논의한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아 이번 사건은 확대되기 보다 대화해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朴成昊 소장: 신박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주변국의 권고를 듣지 않고 돌출적으로 행동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과 특수관계에 있는 중국의 고위급레벨에서도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呂 超 외사처장: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북한이 인공위성 성명을 발표하자마자 러시아가 이를 인정한 사실을 보면 러시아는 사전통보를 받지 않았는가 합니다. 북한은 대포동 1, 2호로 이미 중거리 능력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굳이 미사일 발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이를 강행한 것은 건국 20주년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최춘흠 박사: 북한이 이런 중요한 문제를 중국과는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러시아에는 사전통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군비증강을 자극하여 중국에 곤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한데도 사전에 협의하지 않을 정도로 중·북관계가 소원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朴成昊 소장: 이 문제와 관련 북·러간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기술제공의 댓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중·북관계가 러·북관계 보다 훨씬 긴밀하지만 군사기술적으로는 소원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황병덕 박사: 최근 북한의 국내정세 변화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金 哲 연구원: 많은 학자들이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가능성을 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국학자들은 북한이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의 징후가 미약하다는데 대체로 견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와 관련 북한이 개혁·개방을 한다고 해도 사회주의를 고수하는 한 햇볕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이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작용하겠지만 북한의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없는 한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신상진 박사: 북한의 경제난과 식량난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중국은 탈북주민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한·중협력의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귀측의 견해를 청취하고자 합니다.

呂 超 외사처장: 중국은 경제건설과 지역내 반패권주의라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서 북한의 안정을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을 내심으로는 비판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난민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라 해결할 것입니다. 난민문제는 중국의 치안과 안정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원론적으로는 돌려보내야 할 것이지만 소환된 주민들이 보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서 가능한한 인도적으로 대처하려고 합니다. 난민의 숫자는 대략 해마다 2천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朴成晷 소장: 탈북난민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치안에 영향을 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중국 역시 60년대 재해 당시 적지 않은 난민이 북한으로 넘어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요녕성 사회과학원장(趙子祥) 면담요지('98. 9. 26)>

- Q)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동북3성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어느정도 위축되었는가?
- A) 중국은 한국의 국가주도적 발전모델에 흥미를 가지고 대그룹 창출 등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받아들였으나 한국의 경제위기 이후 신뢰가 저하되고 있음. 동북3성에 대한 주변국의 투자는 감소추세에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제시장 개척에 주력하고 있음. 한·중 경제협력은 자본규모가 작고 기술수준도 비교적 낮을 뿐만 아니라 의지도 없어 보여 발전전망이 부정적임.
- Q)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한 견해는?
- A) 중국 역시 가장 어려운 시기('64 대약진운동 시기)에 첨단 군사기술의 발전이 있었던 바, 북한 역시 충분히 개연성이 존재하였으며, 중국은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놀라지 않고 있음. 북한의 행태는 비이성적 비법칙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북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 경제지표를 넘어서 문화적 차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됨. 북한이 수년내에 붕괴할 것이라는 예측에는 동의할 수 없음.
- Q) 중국식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발전 전망은? 아울러 중국식 사회주의는 자본가적 착취가 존재하는 등 정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A) 중국식 사회주의는 아직 정착되지 않았으며, 이미 많은 문제를 노정하고 있음. 중국식 사회주의의 정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주변국의 경험을 충분히 수용하여 중국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함. 맑스주의의 탄생 당시는 시대적 제한성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발전을 예측하지 못함. 맑스는 인류사회 발전의 윤곽만 제시한 것일 뿐임.

Q) 김대중정부가 추진중인 이중국적 허용문제에 대한 견해는?

A) 충분한 연구는 없으나 민족의 관습상 이중국적은 달갑지 않으며 당연히 반대함. 중국은 이런 문제를 처리하는 데 능란하기 때문에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는 방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음.

Q) 일부에서는 20만 정도의 대량탈북 사태를 예측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대책은? 난민수용소를 건설하고 있다는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A) 중국에는 조선족이 많은 바, 중국은 민족감정을 중히 여김. 따라서,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시 중국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음. 일단 난민이 유입되게 되면 실사 100만명이 된다고 할 지라도 별도의 난민수용소를 건설할 필요가 없음. 중조 변경선이 매우 길고 중국의 흡수력이 상당히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최근 양자강 수재로 흑룡강성의 경우 27만명의 난민이 발생하였으나 별도의 수용소를 짓지 않고 각 마을별로 흡수한 사례가 있음. 난민 수용에 있어서는 계획경제가 긍정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난민을 한곳에 안치하는 것은 도리어 바람

직하지 않기 때문에 변경 뿐만 아니라 내지 등으로 분산수용하게 될 것임.

Q) 심양에 영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필요에 입각하여 이를 중앙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가?

A) 한국정부의 중국 중앙정부에 대한 노력의 부재가 주된 문제점이라고 생각함. 북한이 심양에 영사관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수교 이후에는 동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한국은 국제문제 처리에 있어서 요구가 정당하지 못한 것 같다는 인상임.

회의일정

◆ 1998. 9. 23(수)

09:20~11:30 1 Session: 남북한관계

- 사 회: 丁奎松(所長辦公室 主任, 研究員)
- 발 표: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
- 구조와 기본방향(황병덕 연구위원)
북한의 대남정책(于美華 教授)
- 토 론: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김영춘(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현경(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배(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丁奎松(所長辦公室 主任, 研究員)
楊伯江(東北亞研究室 副主任, 副教授研究員)
戚保良(東北亞研究室, 副研究員)

14:00~17:30 2 Session: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사 회: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 발 표: 중국의 대북한정책(신상진 연구위원)
일본의 대한반도정책(김영춘 연구위원)
클린턴정부의 대북지원 정책결정요인(이현경 연구위원)
일본의 대한반도정책(楊伯江 副教授研究員)
동북아와 중·미관계 전망(丁奎松 研究員)

- 토 론: 황병덕(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배(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于美華(東北亞研究室 教授)
戚保良(東北亞研究室, 副研究員)

◆ 1998. 9. 23(수)

-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 면담

◆ 1998. 9. 25(금): 중국 요녕성 사회과학원과의 간담회

- 주 제: 최근 동북아정세와 한·중협력 방향

- 장 소: 요녕성 사회과학원

- 참석자: 최춘흠(민족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장)
황병덕(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영춘(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신상진(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이헌경(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김성배(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朴成昊(遼寧社會科學院 東北亞研究所長)
呂 超(遼寧社會科學院 外事處長)
金 哲(遼寧社會科學院 東北亞研究所 研究員)
禹穎子(遼寧社會科學院 東北亞研究所 研究員)

◆ 1998. 9. 26(토)

- 요녕성 사회과학원장(趙子祥) 면담

最近 發刊資料 案內

■ 연구보고서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최진욱	著	6,000원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이우영	著	6,000원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김학성	著	6,500원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황병덕	著	6,000원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양자적 접근	손기웅	著	7,000원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鄭永泰	著	6,000원
96-07	韓美 安保協力 增進方案 研究	金國新	著	4,000원
96-08	東北亞 平和體制 造成方案	余仁坤 金永椿 申相振의共著		10,000원
96-09	北韓 經濟改革의 最適方向 研究	吳承烈	著	6,500원
96-10	통일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역할	조민	著	5,000원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著	5,000원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성호 著	5,500원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서재진 著	7,500원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김도태 著	4,500원
96-16 KEDO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전성훈 著	5,000원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박순성 著	4,000원
96-18 북한이탈 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박종철 김영운 이우영 共著	7,000원
96-19 북한의 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허문영 著	5,500원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 관계	김규륜 著	3,500원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남궁영 著	6,000원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강원식 著	8,500원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김성철 정영태 오승렬의共著	8,500원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이교덕 著	4,500원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최수영 著	4,000원

96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96-26 북·미관계 개선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전망	이현경 著	6,500원
96-27 한·일 안보협력방안 연구	전동진 著	4,500원
96-28 북한의 유일체제와 정책경쟁	안인해 著	5,500원
96-29 韓·中 安保協力方案 研究	崔春欽 著	3,500원
97-01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러시아의 역할	강원식 著	5,000원
97-02 북·일수교와 남북한 관계	이교덕 著	3,500원
97-03 경수로인력의 북한체류시 법적 문제	제성호 著	7,000원
97-04 中·北關係 전망: 미·북관계와 관련하여	신상진 著	4,000원
97-05 북한 환경개선 지원 방안: 농업분야 및 에너지효율성 개선 관련	손기웅 著	5,000원
97-06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주변4국의 입장 분석: 전문가 인식조사 결과	박영호 배정호 신상진 조한범 共著	5,500원
97-07 통일한국의 위상	옥태환 김수암 共著	6,000원
97-08 북한 간부정책의 지속과 변화	김성철 著	4,500원
97-09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체제개혁 비교연구	조한범 著	4,500원

97-10	김정일 정권의 안보딜레마와 대미·대남정책 홍용표 著	4,000원
97-11	북한의 지방행정체계: 중앙·지방관계 및 당·정관계를 중심으로 최진욱 著	5,000원
97-12	북한인권문제와 국제협력 김병로 著	6,000원
97-13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의 인도적 지원사례 이금순 著	6,000원
97-14	미국의 대북한 경제정책: 현황과 전망 김규륜 著	3,000원
97-15	통일교육 개선방안 연구 황병덕 著	5,000원
97-16	통일이후 북한지역 국유재산 사유화방안 연구 조민 著	5,000원
97-17	김정일 문예정책의 지속과 변화 이우영 著	4,500원
97-18	북한의 국방계획 결정체계 정영태 著	5,000원
97-19	'90년대 북한체제의 위기와 변화 박형중 著	4,500원
97-20	북한의 제2경제 최수영 著	5,000원
97-21	미·북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대북정책 방향 박영호 著	5,500원
97-22	북한 장래에 대한 일본의 시각 김영춘 著	3,000원
97-23	북한의 관광실태와 남북한 관광분야 교류·협력방안 김영윤 著	6,000원
97-24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이현경 著	4,000원

97-25 북한과 주변 4국 및 남한간 갈등·협력관계, 1984~1997
박종철 著 5,500원

98-01 북한사회의 불평등구조와 정치사회적 합의
김병로
김성철 共著 6,5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6
옥태환
전현준
제성호의共著 10,000원

북한인권백서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0,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7
김병로
송정호 共著 \$11.95

북한인권백서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7,000원

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1998
최의철
송정호 共著 \$11.95

■ 연례정세보고서

96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6~1997 6,000원

97 統一環境과 南北韓 關係: 1997~1998 5,000원

■ 학술회의 총서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7,000원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	9,000원
96-03	북한경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전망	9,000원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7,500원
96-05	南北韓關係 現況 및 '97年 情勢 展望	7,000원
96-06	4자회담과 한반도 통일전망	8,500원
97-01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	6,500원
97-02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7,500원
97-03	한반도 통일을 향하여: 정책과 국제환경	7,000원
97-04	남북한 사회통합: 비교사회론적 접근	8,500원
97-05	한반도 급변사태와 국제법	4,000원
97-06	북한 경제난의 현황과 전망	7,500원
98-01	남북협력: 새로운 지평을 향하여	9,000원
98-02	대북정경분리정책: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	7,500원
98-03	동·서독의 정치통합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5,500원
98-04	동북아정세 변화와 남북 및 일북 관계 전망	6,500원
98-05	남북한관계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5,000원

■ 통일문화시리즈

96-01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上)	10,000원
96-02 統一과 北韓 社會文化(下)	9,500원
97 바람직한 통일문화	9,500원

■ 논총

統一研究論叢, 제5권 1호 (1996. 6)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5권 2호 (1996.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1호 (1997. 7)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6권 2호 (1997.12)	10,000원
統一研究論叢, 제7권 1호 (1998. 9)	10,0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5 (1996)	6,500원
<i>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i> , Vol. 6 (1997)	9,000원

■ Translation Series

97-01 NORTH KOREA IN CRISIS: An Assessment of Regime Sustainability	7,000원
97-02 The Making of a Unified Korea: Policies, Positions, and Proposals	6,500원

민족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민족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보고서, 국문 및 영문 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심으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 2) 연 회 비 :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일반회원 및 기관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민족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 발송).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통일연구논총」과 The Korean Journal of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보고서(년평균 25-30권), 학술회의 총서(년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년평균 10-15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본 연구원의 지난자료를 5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142-076)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전화:901-2559, FAX:901-2547)

회원가입신청서				
성명				
근무처				
	직위			
간행물 받을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전화		FAX	
	전자메일			
전공 및 관심분야				
회원구분	일반회원 () 학생회원 () 기관회원 ()			
본인은 민족통일연구원의 정기회원 가입을 신청합니다.				
199 년 월 일				
신청인				(인)

※ 본 신청서를 팩스나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민족통일연구원 정보자료실 FAX: 901-2547)

※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 (예금주: 민족통일연구원)

※ 본 연구원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더 제공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본 신청서 뒷면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